

<정기총회 자료집 2>

광주환경운동연합  
2013년 정기총회

- 일시 : 2013년 1월 29일(화) 18:30
- 장소 :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3층)

광주환경운동연합

| <http://gjkfem.or.kr>

| 트위터 @gjkfem      페이스북 gjkfem

## 부 록

- 성명서/논평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 활동
- 정관
- 회원 생활수칙

## 【성명서/논평】

**누수 없었던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누수 현상발생.  
방수제 처리 후에도 누수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부실 공사의혹  
그리고 부실한 대책이 불신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2월 상반기 정부는 4대강 16개 보 안전점검 결과 9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정도는 경미한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때 영산강 2개 보의 누수현상이 있다는 9개 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즉 누수현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강 연구단’ 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이 현장에서 확인 한 결과 죽산보와 승촌보에서도 누수 현상이 있었고 보수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다음쪽 사진 참조)

승촌보의 경우 방수제 처리 후에도 누수현상 혹은 정부가 말하는 물비침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부실공사 의혹 그리고 부실한 대책이 불신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속도전 공사가 부실 의혹을 키웠고, 누수가 없다고 밝혔던 승촌보에서 누수와 물비침 현상이 있어 안전진단과 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보로 인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단절 등으로 득보다는 실이 분명하다. 현재 승촌보 어도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홍수기에 가동보를 열어 수위를 낮출 계획인데, 이때 어도는 제기능을 못한다. 수질에 있어, 수질예보제 등을 통해 대처한다고 하지만, 보운영을 전제로 하여 오염발생을 염두한 사후 대책이지 강 자체의 항구적 건강성을 사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보로 영산강 수위를 상승시켜도 또 가동보로 수위를 낮춰도 문제는 발생한다. 강 수위가 상승했을 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 우려, 내수 배계의 난제가 발생한다. 수질관리도 어려워진다. 지천 농업용 저수지를 키워 영산강 물을 공급하고 주암호 물을 도수하여 공급한다는 구상도 보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한 대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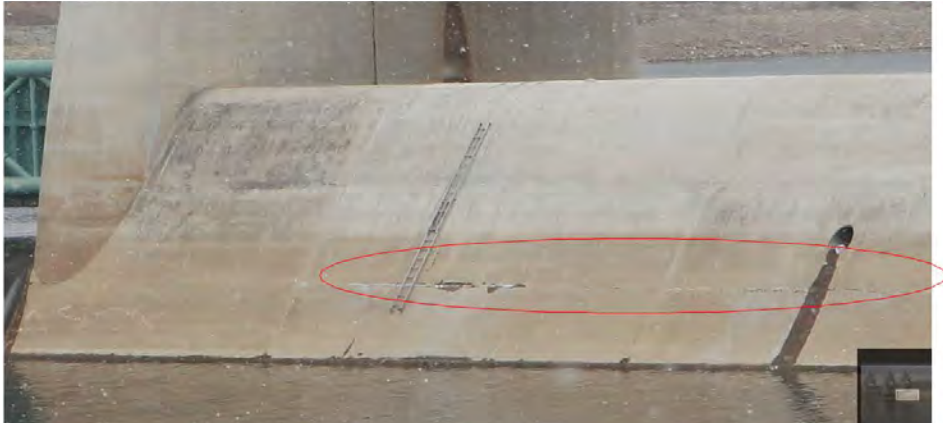
**보의 진단을 제대로 실시하고 보의 타당성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승촌보 벽면. 보하류에서 바라본 모습. 물이 새어나온 흔적이 보인다. (12월 10일 )



▲ 승촌보 벽체에 깨진 흔적(1월 5일)



\*본 사진 ©CBS유영혁 부장



▲ 가로방향으로 물이 새 흔적 위로 흰색 방수처리 흔적. 여전히 물이 새는 흔적이 보임. (1월 12일 )



▲ 승촌보 소수력발전소 쪽 용벽(우안) 벽체에 방수제와 에폭시수지 발포 흔적.(1월 5일)



▲ 기능을 못하고 있는 승촌보 어도. 보 상류에서 보면 어도머리가 허공에 떠있다. 현재와 향후 홍수기에 수위를 낮추면 어도가 기능을 못한다. 보를 만들어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부쳐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즉각 상고 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광주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상주)에서 4대강 영산강사업 소송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4대강사업이 위법하다는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4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청구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과 4대강사업의 법적심판을 기대한 많은 국민들은 큰 실망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은 2009년 11월 26일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4대강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1년 1월 18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 사업이 위법사항이 없으며 1심 청구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한 것이다.

반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생략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영산강사건의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외에도, 최근에는 공사비만 300억원이 넘는 영암호 통선문까지 추가 반영되었다. 영산강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뱃길복원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 이런 사업을 적법하다고 판결내린 것을 수긍할 수 없다.



또한 국가재정법 외에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과 불법이 명확하다. 다양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초법적 4대강마스터플랜대로 영산강기본계획, 영산강사업을 결정하고 각종 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하였다.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위법성을 증명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법적심판을 받아 낼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정부측 대리인들은 박준영전남지사, 최인기국회의원 등 영산강 지역 인사들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영산강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4대강사업 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4대강사업은 반대하나 영산강공사는 필요하다' 는 회피한 주장을 하여 온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할 것이다.

영산강에도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법한 국책사업을 방조하고 키워온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2월 15일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민주통합당 총선 호남권 후보 면접심사 일정에 따른 성명]

## 민주통합당,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다면 4대강사업 찬동인사를 낙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오늘부터 호남권 후보들 대상으로 총선 공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공천 여부도 발표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통합당 공천 결과가 발표될 때 마다, 민주통합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공천혁신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뒤쳐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히 그간,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호남 지역 특색 때문에, 호남지역 후보자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역민과 소통하기보다 당내 공천권자를 해바라기 해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통합당에서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했으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관여하고 조직과 사람을 돈으로 산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환멸감만 키우고 있다. 이는 정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다.

모든 정당들이 개혁과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민심을 살피고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

시민사회중요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를 낙천할 것을 각 당에 요구했다.

사실과 여론을 왜곡하거나 4대강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는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여한 인사들이다. 민주통합당 광주전남권 소속 인사로 최인기(전남 나주, 화순)후보 그리고 이낙연(전남 영광, 함평, 장성), 이윤석(전남 무안, 신안)후보가 낙천요구 대상자이다.

4대강사업을 찬동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낙천 근거가 된다. 혈세를 낭비하는 타당성 없는 사업을 지역발전이라는 허울뿐인 포장을 씌우고 ‘더 많은 지역예산’ 타령을 하며 사업을 키우고 찬동한 인사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민들은 4대강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통합당이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4대강사업을 찬동인사를 낙천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의 결단을 요구한다.

2012. 3. 2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영산강 죽산보 인근 물고기 수천마리 떼죽음 사건에 대한 성명

- 사고 현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익산국토청과 환경청은 사건을 은폐 축소
- 4대강사업은 환경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 사업. 강을 회복하고 살리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3월 7일과 8일 사이에 영산강 사업 2공구 죽산보 하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붕어, 잉어, 누치 등 크고 작은 물고기가 수천마리가 폐사했고 공사측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여 1톤 트럭으로 싣고 나갔다는 목격자 제보도 있었다.

폐사 사건은 지역 객원기자가 영상 취재를 하여 지난 10일 동아닷컴에 보도되기도 했다. 객원기자가 촬영한 영상에 기록된 것은 이미 일차 수거 후 상황으로 폐사량은 수천마리를 상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은 초기 우수로 인한 오염원 유입으로 몇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했고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은폐하려 했다. 환경청은 익산국토청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여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마무리 했다.

비는 3월 5일에 내렸다. 우수로 인한 오염원 유입이 7일과 8일 사이에 일어난 수천마리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집단으로 폐사 시킬만큼의 외부 오염원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죽산보 방류 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의강 연구단' 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이 9일 현장조사때 측정된 탁도가 다른 때와 달리 높은 수치를 보여 이상 조짐을 확인하기도 했다.

작년 1월 승촌보 인근 준설현장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건을 비롯해 여러차례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마다 사건사고에 앞선 관리나 대책 시스템 부재를

그대로 노출시켰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고 상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에 대해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미 4대강사업은 환경 살리거나 재난 대책사업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위한 사업이고 운하 용 수로와 주변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와 사건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현재 까지 일어나고 있다.

영산강 승촌보 누수현상은 여전하고 세굴현상도 낙동강에서 일어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4대강사업의 총체적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미 실패 했다. 살리기가 아니라 위험을 키우고 생태와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다. 강을 회복하고 살리기로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13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4대강사업 홍보용으로 전락한 영산강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 물의 날 행사 때문에, 승촌보 바닥 보호공 보강공사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은 채 물을 채워.
- 안전보다는 4대강사업 홍보가 우선인 정부.
- 천여명이 참여하는 물의 날 행사를 승촌보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4대강 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
- 물의 날 기념행사를 4대강사업 홍보용으로 전락시킨 환경부 국토부는 각성해야 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익산국토관리청, 수자원 공사 등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영산강 승촌보에서 개최하였다.

물의 날 기념행사를 승촌보에서 개최한 이유가 4대강사업 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라고 전해지고 있어, 물의 날 행사를 4대강사업 홍보용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승촌보 아래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3월 20일 오후까지 실시하였다. 가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호공이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인데다, 보수한 보호공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승촌보 행사를 위해 물을 급히 채웠다.

보강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정도 있었다. 다음날 오전부터 물을 다시 채워도 될 만큼 콘크리트 등이 다 말랐는지도 의문이다.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무리한 승촌보 행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간과 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보 공사를 완료했다며 개방행사를 작년 10월 8일과 22일에 죽산보 그리고 승촌보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다. 실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성공적인 사업인양 선전하기 위해 강행한 행사였다. 개방행사를 위해 죽산보 물을 채워 상류인 영산강사업 4공구에서 저수호안이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문제가 없었던 보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물고기가 대규모로 폐사한 사건이 얼마전 죽산보에서 발생했고, 보 누수와 세굴, 보호공 유실 등 안전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해 타당성 논란은 물론이고 속도전 공사와 무리한 홍보로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수질개선이 될 것인지, 수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을 것인지, 홍수시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보는 안전한 것인지 등 정작 4대강공사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검증하기 보다 자전거도로가 어떻고 방문자 수가 얼마인지로 정부는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물문제 해결책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로지 홍보만 있을 뿐이다.

부디 홍보전을 중단하고, 4대강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2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승촌보 균열과 누수, 하상 보호공 유실은 심각한 상황.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부실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 이 4대강 보를 중심으로 보안전성, 세굴상태, 수질 등을 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 했다.

조사결과 승촌보를 포함한 대부분 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열과 누수, 세굴과 하상 보호공 유실 현황이 심각한 상태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지반이 암반층이어서 안전하다고 정부는 장담을 해왔다. 누수 그리고 세굴과 이로 인한 보호공 유실이 마치 별일 아니고 보강공사만 하면 문제가 없는 양 표명하고 대처 해왔다. 그러나 암반층 위에 세웠다는 승촌보 마저 보 균열과 부등 침하가 나타나고 있어, 4대강사업 그 자체가 부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조사단은 승촌보 가동보의 수직 이음부의 충전재가 탈락한 것으로, 보수를 완료했고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에서의 균열은 미세한 것이며 허용범위 이내라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 공사를 완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 균열과 부등침하가 일어났고 하상보호공이 벌써 유실되었다. 시공업체가 작년 8월과 9월에 보강을 해서 누수가 이제는 없다 했지만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측 조사단에서도 수위상승시 추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보 자체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질문제를 유발하는 점과 더불어 보 존치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3월 8일에 일어난 죽산보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은, 영산강 수질과 수생태 상태가 심각하고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가뭄시기에 비가 내려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이지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해명자체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라 인정한 셈이다.

보로 인한 정체수역이 형성되면서, 저심도에서 DO가 낮아졌을 가능성도 크며 4대강사업으로 습지를 파괴하고 모래 자갈층을 없애서 비점오염원에 더 취약한 강으로 만들었다. 또한 보로 정체수역을 만들어 이 역시 오염원으로부터 더 취약해진 상태로 변했다. 4대강사업 전에는 비로 인한 물고기 폐사가 없었던 것이 4대강사업이 완료되고 있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질오염방지시스템과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 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죽산보 상류에 수질측정망이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감지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성공했다고 홍보하려 하지만 이미 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다. 더 이상의 폐단과 폐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산강을 희생시키고 영산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2012. 3. 29.

#### **4대강사업 종단을위한광주전남공동행동**



## 고흥군수, 해남군수는 석탄화력발전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내일(4월 6일) 고흥지역에서는 주민 수백여명이 박병중 고흥군수의 화력발전소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을 예정이다.

고흥화력발전소 반대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봉래면 일대에서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를 위한 주민 서명이 진행되자, 화력발전이 지역에 백해무익한 시설임을 알리고 반대 활동을 진행 중이다.

고흥지역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추진동의안이 군의회에 제출되었던 해남에서도 석탄화력발전 반대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고흥과 해남지역 주민들은 해남 화원과 고흥 봉래의 화력발전을 막기 위해 군청 앞 항의집회와 군수 면담, 상경투쟁 등을 통해 전남지역의 화력발전의 신규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함과 함께 박철환해남군수와 박병중 고흥군수의 화력발전 유치 반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남에는 5,000MW, 고흥에는 4,000MW, 여수는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이 계획되고, 발전사업자들은 올 12월 정부가 확정하려고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 동의 및 해당지자체의 동의를 받기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남과 고흥에서 핵발전소 유치를 주민들의 뜻을 모아 반대 결의한 이후 1년이 되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로 지역과 갈등과 대립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고흥군수와 해남군수는 현재 화력발전소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해남군수는 '선 유치의향서 제출, 후 환경평가' 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흥군수는 '유치타당성' 을 검토 하는 등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기초지자체장의 입장으로 인해 지역내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신안군, 진도군이 해남의 발전소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현재 번지고 있다.

전남에 신규 건설하려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핵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서남해안의 해양생태계의 파괴, 어장의 황폐화, 아황산가스 등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수은 등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청정 전남의 해양과 육지의 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의 환경오염, 주민 건강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

력발전의 신규건설을 포기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도 폐쇄하고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한국정부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펼치면서 석탄화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력을 대체해나가 있는 추세이다. 한국정부도 온실가스 감축(2020년 1990년 대비 4%감축)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석탄화력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절대절명의 현 세대의 소명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현 세대를 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향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주민들이 더럽고 위험한 석탄화력을 반대하는 일은 정당하다. 현세대와 미래세대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석탄화력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음을 직시해야 할며,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 고흥, 해남군수는 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전남도는 주민갈등과 기초지자체간 갈등을 야기하는 기초지자체의 화력발전소 추진 중단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라.

■ 정부는 석탄화력과 원자력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철회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계획을 수립하라.

2012년 4월 5일

###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광주, 고흥보성, 목포, 장흥, 여수, 광양, 순천 환경운동연합)

## -영광핵발전소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따른 입장-

핵발전소의 비상 디젤발전기는 최악의 상황 즉 지진이나 자연재해, 인적실수 등으로 자체 발전전원, 소외전원 등이 상실되었을 시 발전소 운전엔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후쿠시마의 사고에서도 일본정부의 발표를 인용한다면 쓰나미로 인하여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핵반응로를 식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수소폭발과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등의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만큼 중요한 것이 비상 발전기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해 있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경우에도 비상발전기의 고장과 인적실수로 인하여 핵반응로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달여 동안이나 은폐, 1호기 폐쇄요구 등 부산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 이는 한수원사장이 사퇴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정부는 국내 핵발전소의 비상발전기 전체를 조사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3월21~29일까지 영광 핵발전소의 비상발전기를 시험가동 하였다. 여기에 영광군수가 영광2호기 검사시기인 3월28일 영광핵발전소를 방문 시험가동을 참관 비상발전기의 기동실패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광군수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핵발전소 측 관계자에게 “사소한 고장이라도 군민들에게 알려달라, 그래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부탁을 하였다.” 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그러면서 정작 영광군수는 기동실패에 대한 발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영광군수는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공개 사과하라.

우리 공동행동은 영광군수를 면담 비상발전기의 기동실패에 대한 결과를 알리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자. 군수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민간감시기구 위원장으로서 감시센터나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사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광군수는 위원장으로 있는 감시센터보다 한수원(주)을 더 신뢰 한다는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와 고리 핵발전소 사고를 보고도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영광군민은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한수원(주)은 정부와 규제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시험가동에서 기동을 실패 하였음에도 ‘큰문제가 아니다’ . 라고 영광군수에게 보고하고 영광군수는 큰문제가 아니라 군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럼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찌라는 말인가? 정부와 한수원(주)은 이제까지 안전하다는 말만 해왔다. 그러나 영광핵발전소는 3-6호기의 비상냉각계통의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열전달완충판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 5호기의 경우 열전달완충판 이탈로 인하여 핵반응로의 밑바닥이 손상이 된 상태다. 또한, 수차레에 걸친 방사능물질 방출, 드라이버에 의한 냉각재펌프 고장 , 핵연료봉과손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고장이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핵발전소의 사고로부터 정말 안전한 것인지 의심한다.

이에 우리 공동행동은 이번 비상발전기 사고 뿐 만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사고들에 대해서 고강도의 조사를 요구하며, 핵발전소 사고 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 대책을 마련,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 한다.

1. 한수원은 비상발전기 가동 정지사고에 대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즉각 공개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1. 우리는 정부와 한수원(주) 믿을 수 없다.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영광원전 안전점검단의 구성과 공개점검을 실시하라!
1. 우리는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실질적인 ‘핵사고 발생 시 대피계획’ 을 마련하고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라.
1. 영광군수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개사과하라!

2012. 4. 19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준), 고창군 농민회,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어등산 관광단지의 골프장 우선 개장 언급에 대한 논평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최근 어등산 관광단지의 ‘골프장 우선 개장’ 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개발이 무산될 처지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민간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가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완공된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겠다는 입장이다.

83만여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광주시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포탄지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45만평 골프장 조성을 중심으로 특급호텔, 유스호텔, 식물원 등의 위락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다.

당시에도 무리한 개발계획이라는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였고, 결국 민간사업자들의 부도와 교체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광주시가 분명하게 책임지고 최초의 기본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록 이전 시장의 정책결정이었다 하나, 그린벨트 해제와 어등산에의 대규모 골프장 조성계획으로 인해 빚어졌던 많은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밀어부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럼에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골프장 우선 개장이 언급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광주시는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서는 안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2. 4.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핵없는 세상, 핵없는 광주전남을 시작하자!

### 『핵발전소=핵폭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핵발전소와 핵폭탄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생활 속에 상존하고 있는 핵의 위협을 외면하고,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있다. 무감각과 착각은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안전성 강요놀음과 경제성 숫자놀음, 기준치놀음 등 국민을 기만하는 핵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정부는 핵에 의한 생명과 건강의 실제적 위협을 ‘막연한 공포’ 로 매도하고, ‘안전하다’ 만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는 1년 전의 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 23기의 핵발전소에서는 울들어 벌써 6차례의 사고와 고장이 있었다. 특히, 고리원전 1호기의 12분 전력상실, 영광원전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정지 등의 심각한 상황 등은 은폐와 왜곡,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부품의 짝퉁부품 사용과 납품비리까지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중차대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더 이상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하다’ 는 투명하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으며, 신뢰까지 잃었다. 더 이상 핵이 ‘안전하다’ 는 주장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체르노빌의 교훈을 겸허히 수용하고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은 54기의 핵발전소를 5월 모두 멈출 예정이며, 독일정부는 2022년 핵발전 비중 0%를 선언, 벨기에, 스위스의 탈핵시나리오 발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대만의 수명연장 포기, 몽골의 핵폐기장 건설 중단 등 세계는 지금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시작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세계적 흐름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정부는 20기가 넘는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달여만에 형식적으로 마치고 ‘일본과 원자로형이 달라 안전하다’ , ‘기준치 이하라 문제없다’ 라고 발표하고, 31% 핵발전 비중, 전기료 인상, 정전사태 등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더욱 안타깝게도 일본의 위기를 기회로 ‘원자력르네상스’ 를 외치며 원전수출과 위험천만한 폐연료봉 재처리 등 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세계에 천명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 또한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광핵발전소로부터 불과 30여km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광주시는 아무런 대응도, 대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도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고의 위험도를 높이는 영광 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핵의 위협을 높이는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핵없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다!

세계적 흐름이며, 시대의 요구,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스스로 지키는 권리찾기다. 핵없는 세상, 핵없는 광주전남을 만들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을 출범한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은 핵없는 세상, 핵없는 광주전남에서 살 권리와 후대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물려줘야할 의무를 다하고, 핵없는 광주전남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핵바로 알기, 영광 1,2호기 출력증강 저지, 핵없는 광주전남 탈핵시나리오 만들기, 생활주변 방사능 모니터링, 스마트원자로 유치 저지 등 핵없는 광주전남 만들기 위한 지역에서의 탈핵활동과 고리 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철회 및 폐쇄,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해제, 폐연료봉 재처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국적 탈핵연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또한, 핵없는 세상, 핵없는 광주전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할 것이며, 핵없는 세상이 가능함을 광주전남으로부터 증명해 나갈 것이다.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은 핵에 대한 의도된 은폐와 왜곡 그리고 핵안전에 대한 착각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은 영광 1,2호기 출력증강을 수명연장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규정하며,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은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등 핵산업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전국적 탈핵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더 이상 핵없는 세상, 핵없는 광주전남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님을 광주전남에서부터 증명해 나갈 것이다.

2012. 04. 28.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실천연대/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 지금/민중행동 /녹색당 광주준비모임/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전남대 학생행진

##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현재 4개의 주요 방송, 통신사(KBS, MBC, YTN, 연합뉴스)의 유래 없는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KBS 구 노조까지 다음달 3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니 지역방송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언론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의 원인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장악 음모와 공영 방송인 언론사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일방적 언론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 특보였던 김인규 KBS 사장과 청와대에서 조정하는 김재철 MBC 사장이 대표적이다. 정권의 아바타로 전락한 낙하산 사장과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파업에 나선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징직 등 무자비한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고 파업을 깨뜨리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 MBC 김재철 사장이 지역계열사 사장에 자신의 측근을 전면 배치하면서 노조원에 대한 대량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측근을 문화방송·한국방송·와이티엔방송의 사장으로 투입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파괴하고, 권력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해 정권 홍보기구로 전락시킨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총선과정에서 폭로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청와대의 낙하산 사장 투입경위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계 불법사찰 그리고 증거인멸 행태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론 노조의 파업은 이명박 정권과 MB낙하산 사장들이 자행한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로 박탈당한 언론의 공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노동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언론자유 수호투쟁에 나서겠다는 당찬 결의로 현재와 같은 힘겨운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퇴행현상에 낙심하던 국민들은 한국 언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숙시켜왔던 언론의 자유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한다.

또한, 언론을 예속시키려고 파견했던 낙하산 사장을 당장 철회하고 언론 파업 상황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언론파업 장기화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상화하라!
- KBS 김인규, MBC 김재철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 MBC 김재철 사장은 지역 MBC 낙하산 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 KBS 김인규, MBC 김재철 사장은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4월 3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해남군의회 “석탄화력 발전소 유치반대”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 오전 11시, 해남군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초대형 석탄화력 발전소 유치'에 심의한 결과 '유치반대'를 결정했다. 의회는 최종적으로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3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이다.

그동안 해남군은 해남군 화원면일대에 중국계 발전회사인 MPC사가 추진하는 500만Kw (영광원전 5기에 해당함)의 대규모 석탄화력을 유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유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대상지인 화원일대의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해남지역민들은 해남군민반대대책위를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해남화력발전소 대응활동을 전개해왔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와 영암, 신안, 진도 등의 지역민들도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우리는 해남군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유치 동의안을 부결한 해남군의회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 석탄은 화석연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삼분의 일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부분 배출량의 70%에 이르러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의회 이번 결정은 석탄화력이 야기하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석탄화력이 야기하는 각종 환경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막아내지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해남군의회 결정은 석탄발전사업자의 '주민보상' '지역발전' '세수확장' 등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생명'과 '평화', '환경'과 '생태계 보전',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숭고한 결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해남군의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반대를 결정한것은 지난해 말부터 오늘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해온 해남 화원면민들과 대다수 해남군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수천억의 지역지원금과 현금보상이라는 거짓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저탄소 미래'와 '생명'과 '평화'를 선택했었다.

우리는 화력발전의 반대를 위해 그동안 싸워온 해남군민들과, 군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화력발전소 유치반대를 결정한 해남군 의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이후 해남군수와

해남군당국은 그동안의 주민갈등과 행정낭비에 대해 해남군민에 정중히 사과하고, 저탄소 지속가능한 해남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현재 고흥 400만 Kw, 여수 100만 Kw 유치여부에 대해서 고흥군과 여수시가 유치포기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석탄화력은 20세기 탄소시대의 유물이며, 21세기 저탄소 미래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오늘 해남에서와 같이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은 설 곳이 없으며,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위한 광주전남시도민의 의지가 확고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 및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고흥, 여수 등지의 석탄화력발전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2. 5. 7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 부실을 드러낸 광주 수돗물 사고에 대한 성명

광주에서 초유의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용연정수장에서 정수과정에 응집제가 평상시보다 10배 넘게 과다 투입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조치 없이 이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기 까지 했다. 거의 만 하루 동안 문제가 있는 수돗물이 보급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수돗물이 가정에까지 보급되도록 광주시 당국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도 더욱이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수돗물 관리와 사고 대처 시스템에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있는 항목중의 하나가 산성도를 알수 있는 PH다. 그러나 이 PH수치가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이 물이 가정에 전달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이후에야 겨우 조치가 취해졌다. 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즉각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다.

문제의 물이 광주천으로 유입되어 기 천여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 했다. 상수도 사업 본부는 사고의 물이 인체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그대로 신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업자의 실수로 시작된 이번 사고가 수습된다 해서 그대로 끝날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 사고로 광주시는 상수도 사고에 대한 응급 대처에 있어 총체적 부실과 난제를 보여줬다. ‘식·용수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을 평소 해당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고와 대처는 그간 광주시가 다져왔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일순간 무너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안전의 기본인 수돗물에 대한 큰 불신을 남겼다.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 과정과 대처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MB정권의 4대강 맹신론자 박재광 교수의 과기원 총장 선임은 안된다!

- 광주과학기술원(GIST)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내일 23일에 열린다.
- 광주과학기술원 차기 총장후보에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포함되어 있음에 분노한다.

박재광 교수는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MB정권 최대 환경파괴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해, 2009년 언론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과업이자 치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닌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욱 서울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을 ‘하천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4대강 반대 측 교수들을 ” 학자로 보기 어려운 교수들 “ 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에 따라 박재광 교수는 2011년 11월, 법원에서 2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이런 인사가 GIST 총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GIST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GIST 이사회는 총장은커녕 학자 자질에도 의심스러운 박재광 교수의 총장 선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2012. 5. 22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참여자치21

- 세계환경의 날 40주년을 기념하여 -

## 「2030 탄소중립도시 광주만들기」를 제안한다!

### 1. 시작하며

올해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40년전 유엔은 인간환경선언(일명 스톡홀름선언)을 통해 지구환경생태계의 소중함을 공감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환경권 보장을 주창했다. 지난 20년 전, 유엔은 환경생태계 보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은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선언(일명 리우선언)을 했다. 그로부터 40년, 70억 인구의 지구촌 최대위기는 '기후위기' '환경위기' '에너지위기'라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올해 6월에 브라질에서 유엔가맹국들과 국제기구, 지방정부, 민간단체(NGO), 기업 등이 참여하여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일리우+20 회의)'를 개최한다. '리우+20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통의 대안이 모색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과 개발'이 최우선 국가 정책이었다. 지난 리우회의 이후 유엔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합의했지만 한국은 '지속불가능한' 발전 정책을 고수해왔다. 특히, 현 정부 등장 이후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했지만 내용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의 연속이었다. 화석에너지 의존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이나 핵에너지 확대정책이 대표적 '지속불가능한 정책'의 사례이다. 리우+20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G20 국가이자 OECD에 속한 신흥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저탄소 미래와 지속가능한 국토 생태계'를 위한 적극적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인 광주시와 국내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난 20년 동안 도시 확장과 인구증가 등 도시화와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편리와 이기에 바탕을 둔 도로, 상하수도, 도시하천, 각종 건축물 등 도시 인프라가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적인 구조를 일상화시켰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단지 슬로건에 그쳤고 도시의 환경생태계는 열악해졌다. 리우+20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원과 에너지의 남용 구조,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 폐기물 양산, 물 낭비, 무분별한 건축 등을 극복해야 하고 무한정 도시 확산과 개발 등이 반복되는 구조가 개선되는,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2.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도시인가? 지속불가능한 도시인가?

'리우+20회의'를 기해 지난 20년 동안 광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리우선언에서 약속했던 지속가능한 도시가 실천되고 이행되어 왔는가? 또한 어떤 노력이 경주되어 왔는가?

그동안 광주시는 포괄적으로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해 왔고, 한 때는 태양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태양의 도시'를 설정한 적이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지향해왔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환경도시, 태양의 도시, 기후보호도시, 저탄소 도시 등은 구호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내놓을만한 성과물이 없다. 도시의 확장과 산업화 등 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도시인구 증가와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적 구조가 계속되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따라 교통체증과 소음, 대기오염이 가중되어왔고, 기존의 방식에 적용된 각종 건축물의 등장으로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으며, 대량 생산과 소비 패턴 결과물로 폐기물이 증가하고, 물 사용량과 폐수의 증가, 도시생물 종 다양성의 관리 체계 부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의 환경생태계가 열악해졌다. 당연히 도시의 탄소배출은 증가했고 기후위기에 기여해왔다. 총체적으로 광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라 말할 수 없다.

향후 20년 후, 광주의 미래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인가.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면 지속불가능한 도시가 계속 될 것이다. 저탄소 도시, 기후보호도시 혹은 환경생태도시 등은 여전히 구호에 불과하고, 오늘 우리가 지닌 모순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력이 없는 퇴락한 도시가 될 것이다. 특별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리우+20을 기해 향후 최소한 20년, 2030년을 내다보며 도시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 3. '2030 탄소제로도시 광주'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

### 3-1. 2030년, 탄소제로도시 광주의 미래상 정립

탄소제로도시는 '저탄소 도시'이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기후보호도시'이다. 그동안 광주시가 주창해 온 '녹색환경도시'이며 '태양에너지 도시'이기도 하다. 나아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20년 전부터 강조해온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오늘과 같은 20세기 탄소시대의 도시가 아니고, 인간과 자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도시인 것이다. 기후와 환경위기로부터 인간과 자연의 건강과 존엄성을 지켜가는 의미에서 최근 광주시가 제창한 인

권도시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최근의 기후 환경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인류의 소망을 고려하면 ‘탄소제로도시’ 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2030년 광주 탄소제로도시로의 길은 도시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혁명적 변화’ 를 의미한다. 20세기형 사회경제적 탄소의존 도시에서 탈피하는 것은 거대한 도전이다. 지금부터 출발해 1차적으로 2030년, 2차적으로 2050년을 내다보며 도시를 변화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다.

### 3-2. 중장기적 탄소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광주가 탄소제로도시(혹은 환경생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감축계획을 가져야 한다. 현재 광주시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른 탄소(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4%(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는 국가가 정한 목표일 따름이고, 현재의 추세로 하면 이마저도 달성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앞서가는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한다면 현재의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광주시는 2005년 기준으로 2020년 20%(-25%), 2030년 40%(-50%) 그리고 2050년 80%(-90%)를 감축하는, 궁극적으로 탄소제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진도시들이 ‘저탄소 미래’, ‘탄소 해방도시’ 로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 또한 같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도입, 자원과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탄소감축은 녹색도시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녹색경제의 구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탄소제로都市는 기후환경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열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 3-3.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혁과 혁신

광주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도시의 에너지, 건축, 교통수송 및 도로, 공원녹지와 토지이용, 도시의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야별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 등의 개혁 없이 ‘탄소중립도시’ 혹은 ‘환경생태도시’ 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 3-4.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에너지효율성 향상 정책

세계적으로 태양과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기존의 화석연료나 핵에너지가 퇴조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로의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 내외로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중장기 정책목표가 미진하고, 광주시도 비슷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없이 탄소감축이나 탄소중립도 요원하다. 탄소중립도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도입은 필수적이다. 이에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또한 중요하다. 건물이나 교통 분야에서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이용행태, 에너지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낭비구조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은 의미가 없다. 최근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조명분야에서 LED조명기구의 발전이 이를 반증한다. 건축이나 냉난방 기술, 교통수단에서도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

중장기적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의 목표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 2020년, 2030년, 그리고 2050년 목표를 가져야 한다. 2020년 광주가 20~25%의 탄소를 감축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도입과 에너지 효율성 목표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분야는 도시의 녹색경제와 그리고 녹색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광주시가 20~25% 탄소를 감축하는 과정에 아마도 수 천 개의 신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 3-5. 탄소중립 건축물 도입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전기에너지의 70~80%를 소비하고 1차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각종 건축물에 발생

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건축이 도시의 건축에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신규 건축의 경우, 설계과정에서부터 저탄소 기법, 즉 재생에너지 도입과 효율적인 단열 통풍장치 시공,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설비와 전기기기 및 냉난방기기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신축 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도록 에너지이용계획을 사전에 관청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 또한 개조 하여,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냉난방에너지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LED 등 조명이나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기기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공 건축물과 규모가 큰 상업용 민간 건축물부터 앞장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건축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 3-6. 탄소중립형의 녹색교통체계 확립

광주가 녹색환경도시, 탄소제로도시를 지향한다면 도시의 교통수송체계의 전환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통수송의 중심인 자동차가 25~30%의 탄소를 배출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도시 대기오염과 소음의 주범이고 도시공간을 많이 차지하며 또한 도로개설 등으로 도시녹지를 잠먹는다. 현재의 교통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교통체계를 현재의 승용차 중심의 체계에서 ‘도보+자전거+대중교통(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중심의 녹색의 교통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및 보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승용 자동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혼잡통행료, 탄소세 등의 적용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탄소와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 자동차나 대중교통(버스와 택시)에 우선적으로 전기차 등 환경차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차가 민간 차량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가용 중심의 각종 도로의 신규 개설도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신규 도로 등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를 녹색교통 인프라로 전환시켜야 한다.

### 3-7. 물 절약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확립

도시에서 물은 에너지이다. 도시민의 편리와 이기에 따라 물 사용량이 증가해 왔다. 물

이용 증가는 물 부족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상수하수도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도시 수돗물 이동경로에 에너지가 투입된다. 따라서 물 절약은 에너지의 절약과 함께 물 부족을 대비하는 조치이며,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일이다.

빗물을 모아 조경용수나 화장실 및 청소용수로 활용하면 그 만큼 물 절약 효과와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모으기 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빗물이 도시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 도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의 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 3-8. 자원 효율적 도시와 자원 순환체계 확립

오늘 광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대량생산과 유통, 과소비 그리고 대량폐기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2차적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자원의 채취 과정, 생산과 폐기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곧 무분별한 에너지의 소비로 이어진다.

폐기물 감량은 자원절약 및 효율성 이용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과대포장과 각종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재이용 혹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각종 독성 화학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발생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효율적 광주, 자원순환체계를 지닌 도시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 3-9. 탄소의 흡수원 도시녹화

광주는 국내 대도시 가운데 도시공원 면적이 작다. 또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조성되지 않는 곳이 많다. 도심에 고밀도 건축물, 여유 있는 토지의 부족 등으로 도심녹화에 장애가 많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

녹지는 그 자체가 탄소의 흡수원이자 산소를 공급하며 도시 대기를 조절하고 도시의 생물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 준다.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및 확대, 질적 개선, 다양한 방식으로 녹지공간의 확대, 건축물의 녹화, 담장을 허물고 녹화하는 시책, 캠퍼스 녹화 등의 시책을 펼칠 수 있다.

### 3-10. 지속가능한 소비와 교육, 시민참여

탄소중립도시 혹은 환경 도시 조성의 주체는 시민이다. 과다 탄소발생, 자원 과소비형

삶의 패턴전환이 필수적이다. 시 행정의 제도와 정책의 전환과 동시에 시민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건전한 협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NGO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소비 패턴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미래세대들의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시민들 스스로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시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도시는 불가능하다.

### 3-11. 국내외 도시와의 연대 협력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 50%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고, 도시화가 계속되는 있는 국면이어서 국제적으로도 도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시이자 지방정부들의 국제기구인 ICLEI(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와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그리고 UN 산하기구인 UNEP, UN-HABITAT(유엔정주권회의) 등에도 도시에서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금까지 탄소제로도시 혹은 탄소중립도시, 환경생태도시를 선언하고 나선 도시와 지방정부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아직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과 관련 내용을 만한 성과나 시책이 없다. UEAMA(도시환경선언 참가도시 연맹)을 조직하고 ‘도시CDM(청정개발체계)’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파급효과가 없다.

이에 기후변화대응 혹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국제기구 및 유엔의 기구들과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연대 협력해야 한다. 선진 시책을 펼쳐가는 도시나 지방정부들로부터 ‘탄소중립’이나 ‘저탄소 미래’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 3세계 도시, 개도국 도시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노하우를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4. 맺으며

탄소중립도시는 구호나 슬로건만으로는 안 된다. 광주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한다면 확고한 중장기적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해야하며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

저탄소 미래 지향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는 도시의 개혁과 혁신, 나아가 도시의 혁명

적 변화를 의미한다. 도시의 모든 시책이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한다. 오늘과 같은 생산 소비 패턴에 바탕을 둔 도시의 경제도 새롭게 녹색경제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금년 세계 환경의 날은 각별하다. 그래서 '환경권 보장' 을 합의했던 40년 전 스톡홀름선언, '지속가능한 발전' 을 합의했던 지난 20년 전 리우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리우+20' 회의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최대 화두는 역시 지구촌 공동의 위기인 '지구온난화' 에 따른 기후변화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광주와 같은 도시, 지방정부 또한 '리우+20' 회의의 주체이기도 하다.

'리우+20' 을 계기로 광주가 저탄소 미래 '탄소중립도시' 로의 새로운 전환을 추구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2. 6. 5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이정애 임낙평 이인화**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을 환영한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구례와 영암군이 지리산과 월출산에 케이블카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상식밖의 일인지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지리산과 월출산이 해당 지자체의 돈벌이 수단 이 아닌,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공간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곳임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구례군과 영암군에서는 10여년 이상의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내세우며, 이명박정권의 토건중심의 국토개발정책에 편승해, 월출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해왔다. 국립공원을 보존해야할 일차적 책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전남도에서는 케이블카를 통해 국립공원의 환경훼손보다 지자체의 관광수입과 개발사업이 더 중요함을 내세우면서 케이블카 건설이 지역 번영의 매개라며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의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이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일부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절대 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서의 개발을 요구했고,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수모를 겪게 하였다.

또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급조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계획서는 문제투성이로, 환경부가 작성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내린 6곳에 대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부결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해당 지자체인 영암과 구례와 더불어 전남도는 월출산과 지

리산의 생태 복원과 보전을 위한 노력과 이를 근거로 한 차별화된 지역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리산, 월출산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며, 이를 지켜나가는 일차적 소명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거짓 선전과 엉터리 계획으로 인해 갈라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현 정부의 개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6. 26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반대 광주전남시도민행동**

## 가뭄 해결 못하는 4대강사업. 수조원 공사결과, 가뭄피해는 더 커졌고,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홍수 위험 또한 커졌다!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재해 대책이 될 수 없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해와 가뭄피해가 줄었다며 지금까지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광주전남권 가뭄피해는 강 주변이 아니라 도서, 연안, 산간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4대강사업이 물부족 대비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물수요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 여유유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은 해남, 진도, 강진, 장흥, 화순, 곡성, 구례, 담양, 장성, 영광 지역이었다. 영산강 본류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물부족 해결을 위해 4대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없었다. 실지 4대강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현재 해남, 신안, 영광 등에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피해를 겪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독높이기만 하더라도 저수지 보강이나 해당지역에서 용수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영산강 유지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수조원 공사가 끝나자마자, 가뭄을 해결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대책을 세운다며 부산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를 밀어부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사태과약을 못하고 이 가뭄에도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등 4대강에 물이 풍족하지 않냐고 공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영산강 물은 가뭄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물도 아닐뿐더러, 이후 홍수해를 키울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평상시 수위보다 수미터 높아져 본류수위보다 지천 배수로 수위가 낮은 곳이 다수다. 체내지 물이 본류에 쉽게 유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 침수나 범람 위험 지역이 광범위해졌다.

4대강사업이 가뭄, 홍수 위험을 키우고 있다. 보는 수위를 높이고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홍수시에 재난을 키울 뿐이다. 수질도 악화시킨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재해 대책이 될 수 없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2012년 6월 27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행복한 생태공동체 실현” 하겠다는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구체적인 상(象) 안보여

민선5기 전반기 도시 ■환경분야는 광주시의 핵심 환경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행복한 생태공동체를 슬로건으로 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망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영산강의 최대오염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시민의 생활하수 고도 처리시설인 총인처리시설이 환경시설로서 조명받지 못하고 입찰 비리로 유명세를 타게 되어, 최근 수돗물 산성응집제 과다투입에 따른 오염 수돗물 공급사건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것은 광주시 환경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공하게 되고,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반기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행정적 노력들이 요구된다.

민선 5기 전반기의 도시 ■환경분야 평가는 추진되었거나 제시되었던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첫째, 무등산 국립공원화 추진

- 광주시민의 정서적 근원인 무등산 도립공원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이 마무리 되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용역결과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높아져 광주시와 시민들의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무등산 옛길과 무돌길을 개방하고 무등산 순환버스 개설, 군부대를 설득해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를 갖는 등 무등산을 매개로 하는 시민친화형 민관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 둘째,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지구촌 최대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그 감축 목표치가 정부가 정하고 있는 수준에 그친데다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시민참여의 탄소은행제 이외의 탄소감축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제시가 없어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셋째, 국제환경협력**

- 2011년 도시환경협약(UEA) 광주정상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UEAMA 사무국을 광주에 두는 등 국제협력체계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으나, 정작 UEA 회원국으로서 광주가 UEA 협약내용인 도시환경지표를 근간으로 도시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UEA 개최를 계기로 국제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광주시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넷째,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된 광주호 독높이기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광주호 호수생태공원과 주변지역 역사문화 유적들의 훼손을 이유로 일관성 있게 반대의견을 견지해오고 있어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전남도지사가 국비지원을 이유로 영산강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개진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 **다섯째, 정체성 논란 빚고 있는 광주폴리사업**

-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을 시정방향으로 정했으나, 광주폴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소통없이 추진돼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최근 광주폴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광주폴리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도시 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조형물 성격의 예술작품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부여해 추하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들이면 조형고 있어 광주시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2012년 7월 5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 폴리 사업에 대한 공개 제안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두 단체)은 광주시 폴리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진단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6일 「광주 폴리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포럼에서의 광주 폴리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평가와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 1. 광주 폴리 사업의 총평

1)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폴리 사업은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2) 하지만 광주 폴리 사업이 지향하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스타마케팅만을 강조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과의 소통은 부족해서 오히려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포럼을 통해 지역내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은 광주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차 폴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 시민들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차 사업을 강행하면 광주시가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 2. 시민포럼에서 도출된 광주 폴리 사업의 문제점

#### 1) 시민과의 소통 없는 행정의 일방 통행식 사업

광주 폴리 사업의 기획·추진·집행 과정에 형식적인 공청회는 있었지만 시민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1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평가, 소통을 전제로 2차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2) 광주의 정체성·역사성·장소성의 조응 및 조화의 부재

폴리가 설치된 공간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단기간에 11개의 폴리를 건립하는 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광주의 정체성·역사성·장소성에 대한 조응 부족으로 폴리 사업의 지향성과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 3) 스타마케팅에 의존한 행정의 편의 주의적 사업

'세계적인 건축가' 라는 명망성과 수식어 때문에 폴리설치 공간 주변의 일상 생활공간과 작품 디자인의 연관성을 논외로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광주의 도시 맥락 속에서 광주를 이해하고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폴리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스타마케팅이라는 구호속에 광주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 중 하나인 읍성터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정배경과 시민 공감대 및 합의 부족과 작가 선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 4)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조화 필요

폴리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광주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나 '광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도심의 새로운 공공의 공간을 생성하는 매개로써 폴리가 계획되어야 하며, 광주 폴리가 주변 공간과의 조화 및 조응을 통해 공간을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 5)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행정력의 낭비

광주시가 폴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를 이원화시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 3. 광주시에 제안 사항

1) 1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평가를 전제로 2차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지금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2차 사업 일정을 잠정 보류해주길 제안합니다.

2) 각 계 전문가, 행정, 시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광주 폴리 사업 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평가단에서 광주 폴리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2차 폴리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2012. 7. 5(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은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정부, 영산강에 수 조원을 소요한 사업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이었는가?

- 정부, 수질개선에 대한 논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에 영산강 수질 개선이 미흡한 이유로 언급한 내용은, 4대강사업은 영산강 수질 개선사업이 아니었다는 해명
- 영산강 수질악화에 따른 녹조에 대비하여 보 부근에 녹조제거제 구비, 녹조찌꺼기를 수 작업으로 직접 제거시키기도 해,
- 수질개선도, 가뭄과 홍수 대책도 아닌 4대강 사업은 막대한 국고를 낭비한 총체적 실패 사업

환경부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이후 4대강 수질이 대폭 개선 되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환경부가 제시한 근거는 2007~2009년과 올해 상반기 4대강 수질을 분석한 결과, 66개 권역의 평균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공사 이전 2.6mg/l에서 올해 2.1mg/l로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당시 발표에서 제외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경우 오히려 측정수치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수치를 뺀 채, 4대강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홍보를 하여, 언론의 못매를 맞았다.

환경부가 이에 따른 해명 자료를 23일자로 배포 하였는데, 해명 자료중에 영산강 수질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이유로 '○전체 하천유량의 67%가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하천유지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영산강 주변에 농지가 많아 봄철, 특히 영농철에는 수질이 악화 ○영산강은 낙동강과 달리, 식수로 전혀 쓰이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 시설 투자가 매우 미흡' 을 제시하였다.

이는 4대강사업 이전에 영산강 수질의 악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준설과 보를 건설하는 4대강사업은 영산강 수질개선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결국은 4대강사업이 완료된 현재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결과를 놓고, 수질악화 이유를 뒤 풀이 하고 있는 것은, 4대강사업이 애당초 수질개선 사업이 아님을 정부 스스로 해명하고

있는 꼴이다.

보 때문에 물이 정체되어 하천이 아닌 호소가 된 영산강은 녹조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1월과 3월, 6월에 환경단체들이 자체 조사한 수질결과도 그렇고, 정부가 발표하는 수질 자료만 보더라도 영산강은 전반적으로 BOD, COD, 크로로필 A 등의 수치가 악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성이 있는 남조류도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지 육안으로도 가늠이 되는 심각한 녹조현상과 악취로 영산강 수질이 악화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된 본류 영향 때문에 지천에 까지 정체 현상이 일어나, 영산강 본류와 합류되는 지천 하류부에도 녹조가 심각한 상태를 보였다. 정부측은 녹조찌꺼기를 수작업으로 제거 하였고, 보 인근에 녹조제거제까지 구비하고 있다.

이렇듯, 막대한 국고를 소요한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도, 기뻐와 홍수 대책이 될 수 없는 총체적 실패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강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4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신규 석탄화력 증설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잠식한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건설의향서 접수를 마감한다.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으나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20여개 업체가 총 5만MW 용량(원전 5기 분량)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건설의향서 접수에는 지난 5차 계획 당시보다 업체 수는 3배, 발전용량으로는 4배 정도에 이르는 석탄화력 발전 사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석탄화력 건설의향은 전차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 전국 각지 해안주변 지역 수 십 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는 서해, 남해, 동해를 가리지 않는다. 어민의 생계터전인 어장과 갯벌, 자치단체가 막대한 투자를 한 유명관광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우주기지도 예외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삼면을 둘러싼 전 해안선이 석탄화력 발전소로 뒤덮일 날도 멀지 않았다.

### ●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의 전력 예비율 확보

이처럼 최근 석탄화력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현 정부는 전력예비율 저하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 비중 증가를 통한 전력공급 확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대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9,510kWh로 일본(8,110kWh), 독일(7,108kWh)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0년 전력소비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은 물론 미국(1.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삐 풀린 전력수요를 잡지 않는 한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한 전력공급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니라는 말이다.

### ● 총 전력 수요의 59%인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전력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요금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 전열기로 난방을 하는 등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특히 값싼 산업용 전기를 물 쓰듯 펄펄 써대는 산업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은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효자산업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2008년부터 3년간 30대그룹 대기업에 전기요금으로 2조9500억원,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력공급을 확대한다고 해도 눈덩이 불듯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59%를 담당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수요에 따른 전력공급은 틀린 해법이다.

● 오염물질 종합 선물 세트인 석탄화력발전소

값싼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건설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금 곳곳에서 커다란 상처기를 남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82%)을 차지하는 지역은 인구 60만의 대도시인 천안시나 25만의 아산시가 아니라 인구 10만 내외의 보령, 당진, 태안 등 석탄화력이 입지한 지역이다.

충남에서 산업단지의 면적이 제일 넓은 당진시(36%)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3개의 국가산업단지외와 2개의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철강업체가 아니라 당진화력 발전소다. 당진화력이 입주한 석문면은 당진시 12개 읍면 중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의 89.7%를 차지한다.

이 같은 오염물질 종합세트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현 정부는 주민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역 곳곳에 건설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적한 바닷가 갯마을을 온갖 대기오염물질로 뒤덮으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아 왔던 상당수 지역의 주민들은 연이은 발전소 증설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된 석탄화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감내하겠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설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끼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 해당 입지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전국적, 지구적으로 미치는 피해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지난해 작성된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2050년 기온 상승 폭은 유엔 산하 IPCC의 예상치 2도보다 85% 증가한 3.7도이며 해수면 높이는 기존 전망치(9.5cm)의 2.8배인 2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150km<sup>2</sup>의 지역이 범람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마구잡이로 짓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과 같다.

또한 지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2개 업체가 반영된 후 이번 6차 계획에서 붓물 터지듯이 급증한 재벌대기업의 석탄화력 진출은 공공재인 전기를 사기업에게 팔아 넘기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다.

이처럼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들지 못하는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은 해당 입지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선택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 일방적인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가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석탄화력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12. 7. 25

**환경운동연합, 고흥 대책위(고흥군 대책위, 고흥 우주센터피해어민대책위), 해남군  
대책위(해남군 대책위, 해남 회원반대대책위), 목포 대책위, 신안군 대책위, 진도군  
대책위, 남해군 대책위**

## 영광 6호기 핵반응로 정지, 철저한 원인규명이 우선해야 한다!

- 영광원전 6호기 제어봉 구동장치 전원상실 사고
- 반복되는 사고,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이어야 한다.
- 시민안전 점검단 구성해야..

영광핵발전소 6호기가 가동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광원전 6호기가 어제(7월 30일) 오후 2시 57분 핵반응로(=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MG-Set)의 전원상실로 제어봉이 낙하해 핵반응로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의 누출 등의 추가 사고나 피해는 없었으나,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원인규명이 우선해야 한다!

핵산업계와 핵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영광원전 6호기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나 발표에 앞서 “안전하다” 만을 언제나처럼 강조하고 있으며, 핵산업계와 일부 언론 등은 영광원전 6호기의 사고원인과 안전성 등에 확인보다 전력 예비율을 운운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의무에 앞서 원자로 등의 안전성의 확보의 의무가 최우선 이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선행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전력생산 등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번 사고는 핵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봉계통의 전원상실로 인한 사고임으로 더더욱 철저한 원인규명과 추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어봉은 핵반응로에서 핵연료의 반응도를 조절해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핵발전의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비 중 하나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철저한 원인의 조사와 분석과 안전성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음 있는 사고가 아니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원자로의 구조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한다.

2008년 12월 6일 영광 6호기에서 ‘제어봉 위치편차 오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제어봉 계통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또한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6호기에서 지난 4월 30일 ‘핵연료의 결함’으로 인한 핵반응로 냉각재 방사능준위가 상승하는 사고와 열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인 ‘열전달 완충관’은 수년째 파손된 채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때문이기도 하다. 영광원전 6호기는 지난 2002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총 9차례의 사고나 고장이 있었다.

더불어 지난 4월경 ‘짜통 부품비리’로 인한 짜통 부품으로 인한 안전성 훼손우려, 영광원전이 ‘부적합 자재의 발생률’ 가장 많은 287건이 발생 등 기간 영광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킬만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이번 사고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의 폭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공개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만 하루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인 제어봉 구동장치의 전원상실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으며, 진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핵산업계와 규제기관의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현 사고를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등 최악의 핵사고들을 우려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하겠으나, ‘최소의 가능성에 대한 최대의 대비’를 주장해온 핵산업계의 안전에 대한 철칙(?)에 빗대어 사고해 보자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상정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비약이 아

나라 안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안전을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해석할수 없다.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 할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된다.

핵에너지가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저전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가, 핵발전의 확대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담보할수 있는가? 이렇게 공급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안전에 있어서도 불안한 핵에너지에 대해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영광핵발전소 6호기 제어봉계통 전원상실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영광원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점검단’ 의 구성과 공개점검을 실시하라!
- 블랙아웃 운운,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론조장 즉각 중단하라!

2012.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 폴리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해법 미흡 향후 구성되는 (가칭) 폴리를 위한 시민협의체에서 1차 평가 후 2차 사업 논의해야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두 단체)은 지난 7월 5 일, “광주시에 보내는 공개제안서” 를 통해 광주폴리가 지향하는 정체성 이 명확하지 않고 스타마케팅만 을 강조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과의 소통 은 부족해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우려한 바 있다. 또한 1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소 통과 협력 없이 2차 폴리사업이 강행되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오히려 도심 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를 함께 표명하였다. 더불어 우리 두 단체는 광주시 가 계획하고 있는 2차 사업 일정을 잠정 보류하고 (가칭)광주 폴리사업 평 가단을 구성, 전문적인 평가와 이 를 기초로 시민 여론조사, 시민대토론회 를 거쳐 2차 폴리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 기 를 제안하였다.

○ 하지만 광주시는 답변을 통해 “2012년 폴리사업 추진 후 금년 말경 ‘광주 폴리 종합 평가’ 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점검”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했다. 특히 “시민과의 소 통 없는 행정의 일방통행식 사업, 광주의 정체성·역사성·장소성의 조응 및 조화의 부재, 스타마케팅에 의존한 행정 편의주의적 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의 조화 필요,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행정력의 낭비” 라는 지적에 대 해 근본 적인 해법을 마련하기위한 고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 특히 작가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일이라 는 광주시의 정 해진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 진행된 시민보고대회 및 설명 회, 공청회 개최를 명분으로 시 민과의 소통부재라는 지적을 ‘왜곡’ 으로 폄하하는 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행정 편 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지 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두 단체는 답변 내용에 1차 폴리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해 결하고자 2차 폴리의 기획·실행·관리를 비엔날레재단으로 일원화하고 (가 칭) “폴리를 위한 시민협의체” 를 설치하여 종합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점 에 주목 하며 이 협의체가 1차 폴리에 대한 지 역사회의 불만과 우려를 일 시적으로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자문기구로 운영되어서는 안됨

을 밝힌다.

○ 비엔날레재단은 2차 폴리 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왕 설치하기로 한 (가칭) “폴리를 위한 시민협의체” 에서라도 1차 폴리에 대한 평가와 함께 2차 폴리에 대해 지역 사회와 충분히 소통한 후 추진되어 광주 폴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 8. 2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환경운동연합**

해남군의회, 해남화력발전소 유치 재심의 청원 '부결' 환영 성명

## 해남군의회 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 해남군의회 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재심의 청원 부결' 결정을 환영...
- 이제 공동체 복원과 '대형발전사업 영구포기 선언' 등 있어야...
- 고흥과 여수에도 현명한 결정 기대...

○ 해남군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화원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견'에 대해 반대 6명, 찬성 5명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정해남의 미래를 바라며, 석탄화력발전의 저지를 희망하는 해남군민의 민의를 반영한 현명하고,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해남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추진할 근거를 잃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동일사안에 대해 두 번째 내려지는 '부결' 결정이라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5월 7일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유치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었다.

○ 이제 해남군의회와 해남군은 지난 8개월여간 찬반갈등과 혼란의 회오리에 빠져있는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군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며, 환경 파괴, 공동체 파괴, 자립적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대형발전사업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군민을 믿고,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를 믿는 지역발전과 개발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가 수십년간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대형발전사업에 의한 혼란과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대형발전사업 영구포기 선언' 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 또한 요구된다.

○ 해남의 현명한 선택이 해남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고흥과 여수에도 영향을 주고 해남과 같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를 믿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2012년 8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 고흥, 여수, 해남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 폐기하라!

#### ‘석탄화력’ 은 파괴와 거짓뿐이다.

광주전남의 미래는 청정 해역과 친환경 농업 등 ‘녹색잠재력’ 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시도민과 기후변화 시대의 요구이다. 그러나 발전사업자들과 정부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광주전남의 녹색잠재력을 파괴하는 시대착오적 계획을 제출해놓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마감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전국 20개 지역에 핵발전소 50기 규모에 해당하는 50GW(기가와트)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제출됐으며, 그중 우리지역은 고흥 4천MW(포스코건설), 해남 5천MW(MPC), 여수 2천MW((주)한양 1천MW+동서발전 1천MW)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화력은 하루 2만여톤의 유연탄을 태운다. 연간 80여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매립해 그 처리를 위해 매립장이 들어서고, 초당 300여톤의 온배수가 바다로 방류돼 해양생태계와 양식어장을 파괴한다. 또한 굴뚝으로 뿜어져 나오는 수은 등 중금속과 각종 산화물은 암과 폐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또한 대량으로 발생한다. 그 외에도 송전탑, 비산먼지, 경관훼손, 운반선 사고우려, 재산권 제한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진실이 이러한에도 발전사업자들은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 이나 ‘그린’ 이라는 이름을 붙여 눈속임을 하고 있다.

#### 공동체 파괴하는 신규 석탄화력 계획 폐기하라!

고흥과 해남, 여수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기만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수차례 거쳐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핵발전소 유치, 2012년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로 2년 연속 찬반 갈등이 반복돼 지역공동체는 혼란 속에 빠져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말하는 화력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이란 장밋빛 유혹은 발전의 기회가 아닌 파괴의 기회일 뿐이다. 지역공동체를 갈등과 혼란에 빠트리는 발전은 거짓이며, 불가능하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들의 비민주적인 접근방식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거짓과 공동체 파괴를 중단하고 신규 석탄화력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지자체와 의회는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공동체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을 함께 찾아야할 지자체와 의회의 소극적인 대응과 무관심은 또한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녹색의 땅 전남’ 이라는 슬로건과 발전비전에서 제시하듯 이산화탄소를 대량을 발생하고, 자연환경 그리고 도민을 갈등과 혼란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고흥, 여수, 해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책임성 있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흥군, 여수시, 해남군과 의회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석탄화력 논란으



로 지역 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백지화하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녹색잠재력에 기반한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를 결성한다.

고흥과 해남, 여수는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9개월 동안 외로운 투쟁을 펼치고 있다. 석탄화력의 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전남의 문제이며, 전국적인 문제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광주전남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고흥, 여수, 해남대책위원회 등 124개 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를 결성한다. 또한 우리 공대위는 전국의 20여개의 지역과도 신규 석탄화력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해 나설 것이다.

###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는 요구한다!

- 지역공동체 파괴, 자연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포스코건설, GS에너지, 한양, MPC는 고흥, 여수, 해남 석탄화력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전남도와 도의회는 ‘녹색의 땅 전남’ 에 부끄럽지 않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
- 고흥군, 해남군, 여수시와 각 의회는 지역 내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즉각 석탄화력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역민과 지역의 녹색잠재력에 기반한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2012년 9월 5일

###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여수대책위/여수시민단체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 여수지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고흥대책위/고흥군연합자망협회**, 나로도 어민회, 고흥군낙시어선협회, 한국김산업어민회 고흥군지회, 마른김영어조합법인, 고흥군새우조합협회, 고흥군미역협회, 장어연승협회, 고흥군뚝섬회, 여수자망협회, 고흥군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고흥생태문화모임느티나무,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득량만환경보전회, 고흥민주단체협의회, 전교조고흥지회, 고흥발전포럼, 고흥작가회, 동강민주청년회, (준)민주사회실현을 위한 고흥사람들, 보성군농민회, 보성교육희망연대, 전교조보성지회, 통합진보당보성지역위원회 **해남대책위/화원면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 해남군농민회, 희망해남21, 통합진보당해남군위원회, 민주노총해남군지부, 농협노조해남지부추진위원회, 전교조해남지회, 전기원노조 남부지회, 민주연합노조해남군지부, 깨끗한 해남 만들기 운동본부, 해남사랑청년회, 기독교장로회 해남남시찰회, 기독교장로회 해남목시찰회, 해남YMCA, 해남여성인소리, 한살림 해남, 한울남도생협, 해남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우협회해남군지부, 민예총해남군지부, 수산경영인연합회, 해남김생산어민연합회, 해남어촌계장협의회, 울림마당, 김남주기념사업회, 정광훈의장 해남추모사업회(준), 땅끝문학회 **목포대책위/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포럼, 목포신안민중연대,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목포시지부, 전교조목포공립중등지회, 전교조목포사립지회, 전교조목포초등지회, 참여와통일로가는목포시민연대, 목포지역 주거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목포지회, 한국작가회의목포지부, 삼학도 보전회, 어촌계(삼학, 북항, 죽교, 대반, 광산, 울도, 달리, 고하, 유달, 영암삼호) **진도대책위/진도군의회**, 진도군, 그린진도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진도군수산단체연합회,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도군농민회 **환경시민사회/환경운동연합(광주, 전남, 여수, 순천, 고흥보성, 광양, 목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에코바이크,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교조광주지부, 노동실업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지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광주시민센터,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여성민우회, 민중행동, 민권연대, 빛고을생협, 순천YMCA, 불교환경연대, 한살림 광주, 광주YWCA,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우리민족, 참여자치21, 빛고을시민행협

수질 악화, 홍수 위험 가중 시킨 4대강사업.

수질악화가 분명함에도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4대강사업 준설과 보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예측자료가 있었다는 것이 어제 민주통합당 강기정 국회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2006년 기준 3급수 영산강이 준설과 보건설 이후 4급수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수질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홍보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영산강의 수질 악화원인을 유량부족을 제1로 내세우며 준설과 보건설을 하게 되면 영산강의 물그릇이 커지고 유량이 많아져 수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을 해왔다.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녹조현상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근거를 가지고 마치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던것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직후 영산강 녹조는 극심했고, 수질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다. 흐르는 강을 막아 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물은 썩고 퇴적물 또한 쌓일 수 밖에 없다.

또 다시 수질개선을 한다고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인가? 4대강 실패 사업이다. 수질악화가 분명함에도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정권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당장 보를 열어 강을 흐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강을 복원시켜야 한다.

2012. 9. 12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한전KPS는 나주호 인근 연수원 설립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KPS’가 전남 나주시 나주호 인근에 연구시설과 체육시설을 포함한 ‘한전KPS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전력의 발전소 유지보수 자회사인 한전KPS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인 예정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까지 연수원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한전KPS연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두 차례나 사업계획서가 반려된 바 있으며 이에 한전KPS와 나주시는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세 번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안을 조만간 전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환경 전문가들은 연수원이 들어설 경우 비점오염원 증가로 나주호의 수질오염 가중, 범정보호종(수달, 삿, 붉은배새매 등) 서식지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돼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예정지 인근 삼림욕장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연구시설·연수원 시설보다는 생태관련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전KPS가 예정지로 꼽고 있는 지역은 나주호에서도 가장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면서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이 대부분(85.4%)을 차지하는 보전관리지역이다.

그럼에도 한전KPS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의사를 보이는 것은 한전사옥 혁신도시 이전이라는 빌미를 앞세워 환경파괴 여론을 묵살하는 대형 공기업의 횡포와 자사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주시 또한 애써 가꾸고 보전해 온 나주호 주변을 한전KPS와 같은 특정기업에게 아무런 책임감 없이 내주기보다 연수원이 다른 적정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나주호 주변에 한전KPS연수원과 같은 시설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줄 경우 여타의 개발 사업들도 난립할 우려가 커 나주호 보전관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은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

- 한전KPS는 자연보전가치가 높은 나주호 인근에 자사편의를 위한 연수원 설립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명분을 앞세워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들러리서지 말라!
-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호 주변을 특정기업들의 앞마당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공유지역 보전대책을 강구하라!

2012년 9월 12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 본류 구간 역행 침식과 세굴 현상으로 덕홍보 무너져, 연쇄적으로 차집관로(하수관거)도 문제 발생.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세굴 등 침식과 재퇴적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 마련해야!

영산강 덕홍보(광산구 운남동~ 서구 덕홍동)가 지난 태풍 강우 이후 붕괴되었고, 강을 횡단하는 차집관로도 깨져 하수가 누수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광주천 합류점 (덕홍보로부터 약 2km 거리)에서부터 본격 준설한 4대강사업 영향으로 역행침식과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 구조물에서 파이핑 현상(구조물 아래가 세굴되어, 물이 빨려들어 가는 현상)이 일어나 결국 보가 무너지게 되었고 보 위쪽에 인접해 있는 차집관로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덕홍보가 건설된지 십수년 이상 지나 낙후된 이유도 있지만, 파이핑현상이 일어난 것은 4대강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어등대교 아래에 위치한 우산보 우안쪽 호안도 일부 유실되어, 침식이 계속된다면, 우산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4대강사업 준설공사로 하상이 불안정한 상태다. 여전히 역행침식과 퇴적은 계속되고 있다. 영산강을 관통하는 하수관거를 비롯한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

지난 8월말과 9월초에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4대강사업으로 만든 지석강 하류부 보호공이 호안쪽부터 무너져내린 상태였고, 지천 역행 침식으로 흙탕물이 흐르는 등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에 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태풍과 강우 이후에도 침식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4대강사업 이후 후폭풍은 수질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물 안전문제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전거 도로 붕괴등 크고 작은 문제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공사이후 탐방객 수와 홍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굴과 재퇴적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2년 9월 14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광주시는 시청사옆 舊경찰청 부지 특급호텔 추진을 중단하라!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9월 27일, 시청사옆 치평동 1200-2번지 일원의 16,529㎡ 부지에 객실 500실 이상의 특급호텔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주목할 것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가 들어서도록 업무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11일에 사업자 모집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특급호텔 조성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 상무지구 홀리데이인 호텔을 건립할 당시에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호텔부지로 활용케 했고, 호텔 수익보장을 명분으로 대부분이 녹지지역이었던 아파트 건설부지 또한 용도변경을 승인해 특혜논란이 일어났다. 최근, 골프장 우선 개장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사업’ 에도 일부 부지 145,910㎡에 특급호텔과 관광·가족호텔, 콘도 등의 숙박시설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 명분으로 당시 광주시는 특급호텔 건설 등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를 명분으로 어등산 개발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광주시는 시청사 옆의 특급호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

해당부지는 공공청사가 들어서야 할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변지역은 모두 공공기관이 들어 짜임새 있고 조화롭게 도시계획시설이 입주되어 있다. 만약 특급호텔이 들어서면 특급호텔은 성격상 사적공간으로서 이질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호텔 수익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토지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변 공공청사 특유의 개방감이 상실되고 공공서비스 기능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균형감을 잃는, 이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초고층 상업시설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익사업을 이유로 쇼핑센터 등이 호텔시설로 도입될 우려가 높아 그 이질감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 2. 특정사업 유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도시계획 변경은 타당한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도시계획변경은 광주의 건강한 도시발전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광주광역시도 사업유치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잘못된 사례를 만드는 것이 된다.

지난 7월, 광주시는 치평동 홀리데이인 호텔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한 바 있다. 호텔 운영상 회의실 부족을 이유로 건폐율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호텔 수익성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민간업자의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이 경우 시청사 등의 주변의 광장형 개방공간들은 호텔 운영상의 요구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 **3. 교통체계를 뒤흔드는 사업이다.**

상무지구 조성후 그동안 누적된 도시계획 성과로 시청사 주변지역은 서광주IC로부터 주진입부를 형성하여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특급호텔 시설들에 의해 이 일대가 교통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면, 동림IC는 물론 제2순환도로까지 곧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이 도심부에 집중될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결정을 하게 하는 최악의 도시계획 결정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 **4. 광주시의 특급호텔 유치에 대한 모순된 정책결정을 초래한다.**

어등산의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우선 완공된 골프장을 선개장할 것을 결정하고 난 후 곧바로 경찰청 부지 특급호텔 추진을 발표했다.

훨씬 값싸고 이미 관광단지로 조성된 부지에 특급호텔 추진을 포기하고, 부지가격도 높은 데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 부지를 굳이 복잡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면서 특급호텔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 의아하다. 시민들은 결코 광주시의 이러한 모순된 정책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5.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절차이다.

관련 법률에서 도시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면 타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주민 의견과 의회의 동의를 포함한 일정한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공공청사 시설용도를 상업지역으로)을 전제로 호텔유치 공모절차를 한 것은 도시행정에서 선후가 뒤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반대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

## 6.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용을 민간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등의 관련 업무는 광주시의 고유 업무임에도 광주시는 공모에 임한 민간업체들이 관련 용역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용역비만 부담시키고 용역관리를 광주시가 한다 하더라도, 그간의 관행으로 보면, 결국 돈을 부담하는 민간업체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상무지구는 광주에서 최초로 도시설계공모를 통하여 시행한 개발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도시공간 구성이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이 이뤄졌을 것이나 도시가 활성화된 지금에 와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舊 경찰청 부지 또한 조화와 균형이라는 도시계획의 근본적 취지를 바탕으로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호텔과 부수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면 도시설계공모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상무지구의 전체적인 조화가 파괴되고 앞서 지적한대로 상무신도심을 비롯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급호텔 추진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무리한 행정절차와 내용에 따른 피해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상무지구와 광주시민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광주시가 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이유로 특급호텔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무엇보다 합리적인 정책내용과 결정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정사업 舊경찰청 부지의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특급호텔 유치 절차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2. 10. 10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임낙평 이인화)

## 영광 5호기 출력감발사고, 땀질처방이 반복된 사고를 부르고 있다!

- 땀질처방으로 버티지 말고 안전 확보위한 총체적 점검 나서야...

영광원전이 불안하다. 영광5호기가 불안하다. 지난 10월 2일 제어계통 통신카드 문제로 원자로 정지까지 됐던 영광원전 5호기가 15일 오전 10시 50분 변압기 안의 유증가스 농도가 증가해 출력을 87%로 감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난 13일 발전을 재개한 5호기가 재가동 이틀 만에 다시 감발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계속되는 영광원전의 반복적 사고로 지역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 올 들어서 원자로 정지 및 감발, 연료결함 등 벌써 6차례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이나 해결없이 땀질식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원전 운영의 제 1원칙은 안전이다. 원전이 자신하는 안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영광원전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총체적 안전점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말로만이 아닌 영광원전의 안전을 확인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영광원전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2. 10. 15.

**광주환경운동연합**



짜통부품에 이어 위조부품까지.

### 영광핵발전소 발전소인가? 핵폭탄인가!

- 짜통부품에 이어 위조 부품까지...
- 불안을 넘은 생명위협행위...
- 주변 지자체, 의회 그리고 시민 참여하는 안전점검단 구성 검증해야...

#### 영광원전 5, 6호기가 또 가동을 중단했다.

지식경제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부품 공급업체 8개사가 외국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 보증서를 위조해 237개 품목, 7천700여개 제품을 영광원전 3, 4, 5, 6호기와 울진 원전 3호기에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위조부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영광 원전 5, 6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 영광원전의 잦은 부품 고장과 사고의 원인은 위조부품 때문!?

이번 발표는 기간의 사고와 고장의 원인이 위조부품에 있었음이 확인해주고 있다. 영광 원전은 올 들어 7차례의 부품 고장 및 원자로 정지 등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짜통부품 비리가 밝혀지기도 했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위조부품, 짜통부품과 무관하다고 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조부품, 짜통부품으로 채워진 원전은 더 이상 '발전소가 아니라, 폭탄'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영광 3, 4호기와 울진 3호기 또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핵발전소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위조부품이 하나라도 사용된 원전 전체의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수준으로 부품 하나하나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영광 5, 6호기뿐만 아니라, 위조부품 사용이 확인된 영광 3, 4호기와 울진 3호기에 대해서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영광원전의 안전 불감증은 '불치의 수준'

영광원전측은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이 제안한 시민과 반경 30km내의 영광, 고창, 광주 등 지자체 및 의회가 참여하는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민안전점검단' 구성을 "부적절하다" 고 일축하고 사건 무마용으로 '반부패 시민감시단' 을 발족하는 것

으로 논란을 넘기고 원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영광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불감증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불치의 수준' 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 **30km내 지자체, 의회,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단 구성해 검증...**

영광원전 5, 6호기에 대한 해체수준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와 부품의 교체를 촉구하며, 위조부품, 짝퉁부품 비리와 은폐,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 영광원전의 안전문제를 더 이상 원전측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또한 핵발전소의 사고는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 30km이내가 직접적인 피해지역임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인식하고 있다. 안전점검 실시에 지역주민 등 시민과 원전 30km내의 지자체 및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영광원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공동안전점검단'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2. 11. 5.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실천연대/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 지금/민중행동/녹색당 광주준비모임/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전남대 학생행진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 실천 거리 캠페인 개최

‘공회전 STOP, 맑은 공기 GO’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 실천 거리 캠페인 개최

- 일시 : 11월 7일(수) 오후 2시 ~
- 장소 :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 신세계백화점 4거리
- 내용 : 방독면 마스크맨이 도심 거리에서 현수막 피켓을 이용 ‘공회전 STOP! 맑은 공기 Go! 를 호소함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임낙평, 이인화) 과 푸른광주21협의회(상임회장 박경린)가 11월 7일(수) 오후 2시 광천터미널 인근 신세계백화점 4거리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실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 광주시의 주요 대기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7대 도시중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쾌적한 대기환경 즉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아토피 피부질환 증가, 호흡기 환자 증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대기질과 무관하지 않다.

○ 차가워진 날씨로 자동차 공회전이 심화될 시기여서, ‘공회전 STOP, 맑은 공기 GO’ 라는 주제로 실시할 이날 캠페인에 버스 기사로 구성된 환경통신원 모임회원 20여명이 동참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등 환경단체들이 그간 광주 도심 주요 거점의 대기질을 조사 하는 등 대기질개선을 위한 시민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거리캠페인과 조사활동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망국적 토건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남과 제주간 KTX 해저터널사업'이 그것이다. 어제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 위장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호남권 공약으로 위 'KTX 해저터널 사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호남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면서 집권하면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KTX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영산강 4대강 사업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박준영 지사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토건식 지역개발론'이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지역 발전' 전기가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지역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말초신경을 자극해 왔다.

지난 대선,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 타당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정권 출범 이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홍역을 겪었다. 국민들은 잘못된 공약으로 인해 국토 환경파괴의 불가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KTX 해저터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조원+알파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14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는 이 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장이나 박준영 전남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호남과 제주, 혹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과 하늘 교통이 불편이 없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KTX해저터널 사업이 'MB 4대강 사업'의 재판(再版)이자, 망국적 토건사업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공약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KTX 해저 터널 개발'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원장과 박영선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차체에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과 선거대책본부에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정치인이나 토건 정치인이 발호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2. 11. 8

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 여수, 장흥, 순천, 보성, 광양)

##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와 해법 찾기

### 환경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스톡홀름선언으로 잘 알려진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UNCHE)은 환경보전을 위한 19 번째 원칙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환경보전과 개발 문제에서 개인, 기업, 집단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열린 의견의 근간을 넓히기 위해 필수적...’ 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후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여러 노력의 이행 전략이자 공통의 실천 덕목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경 관련 선언, 국가계획, 대책 등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현 정부의 환경교육 정책을 보면 분노와 더불어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노와 위기의 실체는 환경부가 국가 환경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다. 정부는 2008년 오랜 기간 환경교육운동 진영과의 협의를 통해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했으나, 기반이 될 지역의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같은 중요한 일은 감감 무소식이고, 명목상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만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뒤가 전도된 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인력도 없이 자격 논란의 프로그램만을 인증하는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최근 부랴부랴 내부 문건이나 다름없는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줄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보니 운영기관 지정 연한조차 언급되지 않고 공고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지어 심사과정에서는 환경부가 특정 단체를 비호하거나 사전에 내락되었다는 소문까지 퍼져있어 공정해야 할 국가 기관 지정 절차에 공권력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인류적 환경교육 의제를 국가가 통제하거나 획일화 하려는 잘못된 입장에서 파생된 일로 심히 우려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국가 환경교육 예산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환경보전협회 한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약 50억 원이던 환경부 환경교육 예산이 내년도 약 90억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환경보전협회의 환경부 환경교육 분야 위탁 사업비는 2008년 12억 원(약 24%)에서 내년도 약 45억 원(약 50%)으로 환경부 해당

분야 예산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예산의 집중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의 질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부가 환경보전협회라는 법정 단체 하나만을 위탁사업 파트너로 선정해 예산을 몰아주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보고서가 양산되거나, 더 우수한 위탁기관의 참여를 원천 배제해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며 도시, 산골, 바닷가, 학교 등지에서 오롯이 시민환경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허탈하다. 지속가능한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색 성장을 주창한 현 정부가 반생태적인 밀실 행정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방관자적 자세로 국가 환경교육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 이유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1C 위기에 처한 지구는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의 전환을 강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죽어가는 강을 되살리는 교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에너지 교육,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교육이 시급하다. 환경교육은 늦지 않게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자 목표임을 다시금 천명하며,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 환경부는 부실한 지정운영계획과 부당한 심의 절차에 대해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를 중단하라!
-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몰아주기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환경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집행과 한국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라!
- 환경부는 한국 환경교육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협의 구조를 마련하라!

2012. 11. 08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한수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 “영광원전은 안전하다” 는 그 거짓말 더 이상 광주전남 시도민은 믿지 않는다!

지난 5일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부터 10년간 영광원전 등에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 7,600여개가 납품되고 영광3, 4, 5, 6호기와 울진 3호기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위조부품에 대한 외부제보가 있고 한달이 지난후에야 나온 발표였다. 한수원측은 자체조사를 빌미로 한달여간 불안요소를 확인하고도 원전 가동을 계속했다.

지난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마무리했다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 3호기 제어봉 관통관 균열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제어봉은 핵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원전안전의 핵심이다. 이 제어봉을 안전하게 원자로에 삽입하도록 유도하는 제어봉 관통관에 균열이 6곳이나 발생했다. 원자로내 냉각수 누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다. 그러나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균열발생 시점에 대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도 엇갈리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정비때까지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 안전위원회는 “2004년부터 균열의 징후가 있었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발생시점과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품교체를 통한 조기 재가동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핵산업계의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다시한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먼저 블랙아웃을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원전의 안전에 앞서 조속한 원전의 재가동을 중용하고 있다.

이번 위조부품 납품비리와 영광 3호기 제어봉 관통관 균열사고 등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부도덕한 납품업체의 비리나 부품 검사와 납품시스템만의 문제도 아니다. 영광 원전의 총체적 안전시스템의 붕괴의 문제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 한수원의 부실과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영광원전의 안전을 더 이상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그간 정부와 안전위, 한수원이 보여준 영광원전의 안전점수는 '0' 점에 가까운 낙제점이다. 영광원전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의 영광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 무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영광원전 1~6호기 즉각 가동중지와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라!
2. 위조부품 비리, 3호기 균열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3. 지역주민과 지자체 및 의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조사단으로 개편하라!
4. 블랙아웃 운운하며 국민의 전력부족 불안 조장과 재가동 중용을 중단하라!
5. 부실하고 무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6. 영광원전 30km내 주민,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행동(가)'의 구성을 각 지자체와 의회, 시민사회에 제안한다!
7. 전남도와 광주시는 핵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고, 탈핵과 에너지전환에 나서라!

2012년 11월 14일

**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핵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시민연대/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당/민주노총 광주본부/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 지금/민중행동/녹색당 광주(준)/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전남대 학생행진)



## 낙동강 보 균열, 영산강은 과연 안전한가?

- 보는 홍수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고, 수질 개선을 방해하는 시설물
- 보 안전성과 더불어 보 존치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민주당 4대강조사특위가 낙동강 철곡보를 조사한 결과, 보 균열과 하상이 침하되어 보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이번에 밝혀진 낙동강 철곡보 사례를 보면서 영산강은 과연 안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사한 현상이 영산강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줄속과 속도전으로 진행된 4대강사업의 보 안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실지 연초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산강 승촌보 등에서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보강공사를 한 사실도 확인 했다.

완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3월에는 승촌보 물받이공, 하상보호공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했다.

올해 홍수기에 영산강 상류 덕홍보가 파이프링 현상으로 붕괴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승촌보 안전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암반에 설치해서 안전하다고 장담했으나, 완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보호공 유실이 있었고 보강공사를 하였다. 이 보강마저도 제대로 되었는지, 이후에 문제는 없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모든 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가뭄과 홍수 예방과 수질에 도움이 되는 커녕 문제를 키우는 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질 개선에 대한 부담과 향후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한다면 보에 대한 대책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 안전성과 더불어 보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대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1월 20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광주지역 학교 등 방사능 측정 결과

- 광주지역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103개소 방사능 측정
- 최저 0.083  $\mu\text{Sv}$ 에서 최고 0.173  $\mu\text{Sv}$ 로 나타나..

광주환경운동연합,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0일, 광주지역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103개소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6일~11일까지 진행했으며, 측정결과 최저 0.083  $\mu\text{Sv}$ (마이크로시버트)/h)에서 최고 0.173  $\mu\text{Sv}$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평상시 우리나라 환경방사선량률의 범위인 0.050~0.300  $\mu\text{Sv}$ 에 해당한다.

측정결과, 광주지역의 공간방사선량은 현재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지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측정 당시의 강우 및 풍향, 지형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며, 환경방사선량률의 정상범위 수준으로 최저값과 최고값의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 광주지역 범위는 0.110~0.131  $\mu\text{Sv/h}$ 로 나타났다.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등 시설의 방사능 측정 결과가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방사능 아스팔트 사례에서 보듯 생활주변 방사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도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영광원전의 위조부품 및 제어봉 관통관 균열사고 등 잦은 사고 및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영광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 생활주변 등의 방사능을 직접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를 우선 진행한 것은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유아,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민간에서 최초로 광주전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측정 사례라

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감시망에 의해 광주내 지방측정소 1개소 간이측정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정형으로 공간감마방사선량 감시에 한하고 있어 생활주변 등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후에도 생활주변 방사능 측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이며, 광주도심의 주요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ikfem.or.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측정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측정에 사용한 방사선 계측기는 'Inspector Alert' 으로 방사선의 존재 여부 및 세기 등을 측정한다. 이번 측정은 정확한 계측보다는 생활방사선의 존재 여부에 맞춰졌다. 향후 측정에서 특이반응 및 지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핵종분석 등 정확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영광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생활주변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금,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주변 방사능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 11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원전 4호기도 제어봉 안내관 균열

### **영광원전 가동 중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하라!**

- 영광4호기 제어봉도 안내관 균열, 3호기와 4호기는 쌍둥이원전
- 4호기 13차 정기검사 보고서에는 균열관련 언급없어...
- 안전기술원 2010년 3호기 배기관 균열 사고시 4호기도 점검주문
- 지역주민들 영광원전 전체 가동중단 후 지역주민 참여하는 안전점검 실시 요구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4호기 제어봉 안내관도 이상 징후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영광 3호기와 같은 제어봉 안내관 균열이다. 특히, 3호기와 4호기는 한국형표준원전으로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으로 3호기 균열이 알려진 당시 4호기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또한, 2010년 3호기의 배기관 균열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 사후조치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동일 원자로형인 4호기의 안내관 및 배기관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한수원측에 주문했었다.

위조부품과 3, 4호기 균열사고 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원전의 사고와 비리에 대해 규제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규제가 사업자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영광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지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영광원전 가동중단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구성을 지난 15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제안한바 있다. 또한, 영광원전의 안전을 지역민과 국민이 확신할 수 있을때 재가동을 지역민과 합의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국정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더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과 국민들의 인식이다.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영광1,2호기 출력증강 중단하라!**

영광1,2호기는 출력증강을 위한 주요설비 및 부품의 교체를 마쳤다. 품질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진행된 주요설비 및 부품의 교체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출력증강으로 인한 원자로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안전여유도 떨어뜨리는 출력증강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영광1,2호기의 출력증강과 교체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민의 요구대로 출력증강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영광원전 문제는 영광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광만의 문제로 국한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와 원안위, 한수원의 대응방식이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사고가 보여주듯 핵발전소의 문제는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만의 문제일수 없다. 최소 30km 까지가 직접적인 피해지역에 속한다. 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회 등에도 진행상황이 보고되고 주변지역의 요구 또한 묵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농경지 침수피해 심각하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인근 나주 다시 일대 농경지 침수 피해 심각
- 영산강에 만든 죽산보로 수위가 상승하여 지하수위도 상승. 인근 농지 늪지로 변해
- 정부와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은 지하수위 상승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결과는 반대
-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강을 흐르도록 복원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보를 만들고 하천 수위를 상승시킨 결과, 인근 농지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죽산보 인근 일대 나주 다시면 신석리, 가흥리, 죽산리 일대의 농지가 늪지화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보리 농사를 포기했고, 그나마 지대가 높아 파종한 경우도 보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라며 이 또한 포기한 상황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파악하기로는 가흥리 일부의 경우만 현재 10ha 가량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를 만들어 수위가 상승하면 당연히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어, 인근 농지에 침수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예고했었다. 실제, 지하수위 영향과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죽산보 일대에만 4.5km<sup>2</sup>면적에 달하는 농지 등의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발표한바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측에서는 죽산보 인근 지반이 점토층이어서 물이 투과하지 못하여 지하수위가 지표면 아래에 머물러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업결과, 정부 주장과 반대로 침수피해는 일어나고 있다. 공사 당시 주민들도 침수피해를 예측하여 죽산보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재는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죽산보 사업공구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에 지하수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고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위 상승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주장한 측에 다시 조사를 의뢰한 셈이다. 그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4대강사업의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보를 만들고 나서 물고기가 떼로 죽고 녹조현상과 수질악화,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정작 물을 가둬두고 있지만 가뭄해결에도 소용이 없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조가 넘는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4대강사업을 밀어부친 결과 강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조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후보는 대선 공약과 정책에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이 없다. 매년 1조의 유지비, 앞으로 예정된 15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책도 의견도 없는 셈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강을 흐르도록 복원해야 한다.

2012년 12월 13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전남(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전남 주요 환경현안을 되짚어보고,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의 길을 모색하고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매년 연말 공동으로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의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와 연계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사업과 고흥, 해남, 여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논란이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은 생태계 파괴로 수질은 악화되고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고흥과 해남, 여수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논란은 지난해 핵발전소 논란에 연이어 지역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2012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로 ▶영광핵발전소 잦은 사고와 짝퉁, 위조부품 파문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고흥, 해남, 여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저지 ▶광주 수돗물 사고 ▶영산강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피해 확산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 ▶전남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광양 불산제조공장 계획 백지화 ▶여수국가산단 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가뭄과 태풍 등 기후재난 피해 심화를 선정했다.

### 1. 영광핵발전소 잦은 사고와 짝퉁, 위조부품 파문

영광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영광핵발전소는 지난 3월 비상발전기 정지사고 은폐를 시작으로 짝퉁부품에 이어 원자로 정지사고, 그리고 위조부품까지 잦은 사고와 비리로 얼룩졌다. 지난 10년간 1만여개의 짝퉁, 위조부품이 납품되고 사용되는 등 원전부품에 대한 검증체계는 무너지고,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핵발전소가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져 있음이 밝혀졌다. 가동을 중단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있는 영광5, 6호기 뿐만 아니라, 영광 전체 호기에 품질검증서 위조부품과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사용됐음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영광3, 4호기의 제어봉안내관 등의 균열을 수년째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핵산업계는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을 이유로 조기가동을 압박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2.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오는 27일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7일 국립공원 지정을 의결한 계획이다. 면적은 기존 30.2km<sup>2</sup> 보다 2.5배 넓어진 총 75.5km<sup>2</sup> 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0년말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한 후 2년여의 무등산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국립공원 승격운동의 노력의 결과이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은 1988년 월출산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후 24년 만이다.

## 3. 고흥, 해남, 여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

고흥과 해남은 2011년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문제로 지역내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핵발전소를 저지했다. 지역의 갈등과 혼란이 아물기도 전에 올해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시한번 지역공동체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고흥(포스코건설, 400만KW), 해남(MPC 500만KW), 여수(동부발전/한양, 200만KW)를 비롯해 전국 20여개 지역에 50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의향서가 제출됐다.

이에 고흥, 해남, 여수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300여일간의 천막농성과 대규모 집회, 1인시위, 식발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저지활동을 전개했다. 지역민들의 지역의 녹색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한번 대형발전사업을 주민들이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 4. 광주 수돗물 사고... 응집제 과다 투여된채 가정에 공급

지난 5월 광주 용연정수장 정수과정에서 강산성의 응집제가 평상시보다 10배 이상 과다투여된채 아무런 조치없이 만 하루동안 가정에 공급되는 초유의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문제의 수돗물이 광주천으로 흘러들어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기에 이르렀다. 수돗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관계당국은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내리고 있어 수돗물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수돗물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처 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 5. 4대강사업에 의한 영산강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피해 확산

4대강 영산강사업이 화려한(?) 준공식을 마쳤다. 그러나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 등 물

흐름을 막는 보로 인한 유속 감소와 자연습지의 파괴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밤낮으로 진행된 공사로 인해 보의 곳곳에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고, 세굴과 하상보 호공의 유실, 본체의 침하, 역행침식 등의 부실이 확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13억톤의 용수 확보가 명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내기철 농업용수로 공급되지 못하고,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돼 농지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이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갈등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6.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

MB정권의 자연보존지구내 시설물 설치허용 등 개발 규제완화에 편승해 촉발한 일부 지자체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지난 6월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과 월출산권 6곳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시범지구 선정을 부결했다. 지역발전과 관광활성화가 국립공원을 파헤치는 명분이 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생태복원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차별화된 지역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정부는 개발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7. 전남 신재생에너지 사업 잇따라...

전남도는 '5GW풍력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200MW 육상풍력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포스코에너지 등과 체결했다. 2015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서해안 일대에 국내 최대의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12만여 가구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풍력터빈 생산 투자협약도 체결했다. 5GW 풍력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23조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4GW, 육상풍력 1GW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학교 옥상을 이용한 '햇빛에너지모아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에버테크노(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20개 학교에 우선 설치하고, 2015년까지 도내 국공립학교 458개교에 44MW를 설치하고 추후 도내 750여 전체 국공립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력과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8. 광양 불산제조공장 계획 백지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영국계 석유회사인 멕시컴과 2014년까지 3천억원규모로 광양 컨부두

배후부지 13만㎡에 연간 13만5000t의 불산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의 MOA를 체결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주변 순천과 여수시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멕스켄 과 항만 공사를 압박했으며, 불산공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멕스켄이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11월 계획이 백지화됐다.

불산은 리튬이온배터리 전해물질로, 9월 경북 구미에서 누출사고로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2천여명의 주민과 동식물 등에 피해를 냈었다. 구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9. 여수국가산단 업체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환경부가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조사’ 에서 여수국가산단내 호남석유화학, 휴켄스, 한국실리콘 등 3개 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납, 비소, 벤젠, 페놀 등 총 25종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법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지자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의 부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드러낸 사건이다.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점검, 여수산단 전체 기업에 대한 점검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장 구비, 상시 관리감독체계 구축하고, 주변주민과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10. 가뭄과 태풍 등 기후재난 피해 심화

봄철 가뭄으로 광주, 나주, 담양, 장성호의 평균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모내기철 농업용수 제한 공급 등으로 인해 모내기에 차질을 빚었다.

여름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가 광주전남지역을 휩쓸어 양식장 파괴, 과실수 낙과, 침수피해, 인명사고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 피해액만도 실질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뭄과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재난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2012. 12.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 활동】**

**영산강 일대 주민, 4대강사업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내달 13일 예정 '귀추 주목'**

광주·전남·전북지역 영산강 일대 주민 600여명이 지난 2009년 말 제기한 '4대강 종합 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13일 나올 예정 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1일 “지역주민들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지난 2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고 밝혔다.

지난해 초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은 바로 항소해 최근까지 자료 문건제출, 자료요청(문서 제출명령) 등에 이어 최종 변론을 마쳤다.

이날 주민 측 대리인 배영근 변호사는 “무지막지한 4대강 사업 폐해가 이미 나타났고 현재 진행중이며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 역행침식으로 다리가 무너지고, 재퇴적, 보 누수 등등 부작용과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 며 “정부가 목적으로 한다는 수질, 홍수, 물 부족, 지역발전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를 만들어 수질악화 및 홍수 피해의 가중 을 초래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 측 변호사는 “방치된 영산강을 개발해 물 부족 문제, 홍수문제,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는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지리산-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단체-지자체 공방

- “생태경관 파괴” vs “관광소득 증대”

지리산과 영암 월출산 등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를 신청한 구례군(지리산)과 영암군(월출산)이 다음 달 23일까지 관련 자료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리산과 월출산 등 전국 7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경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반대 광주전남 시도민행동은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의 생태경관을 파괴하며 지리산 주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지리산종교연대 등 전북도내 환경·시민단체들도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을 둘러싼 전북 전남 경남 자치단체들이 경제적 효과만 부풀려 케이블카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남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 남원이나 전남 구례, 영암지역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손태열 의원(영암1) 등 전남도의회 의원 22명은 최근 월출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관광소득 증대와 함께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관광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는 월출산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리산 케이블카의 도화선이 된 구례지역도 “구례가 가장 오래전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여건상으로도 최적지”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도 남원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광주시민단체 "핵 안보 아닌 핵 없는 세상"



【광주=뉴스시스】 안현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정당·환경단체들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한 26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안보가 아닌 인류공동체의 안전"이라며 핵무기와 핵발전소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군축과 핵발전 중단을 전

제하지 않는 핵안보 조치는 핵테러를 막기보다 기존 핵보유 국가들의 핵패권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핵무기나 핵물질의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며 "인류를 수백번 공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쌓아두고,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핵재난을 겪고도 핵무기와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위험한 집착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핵을 독점한 미국 등 일부 핵보유 국가들의 선별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는 핵확산 방지를 더욱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핵갈등을 초래했다"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과 같이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핵물질 이동차단 조치는 국제법상 논란과 동북아·중동지역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탈핵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탈핵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같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무기든 핵발전소든, 핵은 안보의 수단도 지켜야할 대상도 될 수 없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핵발전 확대를 부추기는 정상회의에 맞서 핵무기·핵발전소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당광주준비모임, 통합진보당·진보신당 광주시당,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행동지금,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준) 등이 참여했다

ahj@newsis.com

## 환경연합 "고흥·해남은 화력발전소 반대하라"

(광주=뉴스1) 위안나 기자=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고흥군수와 해남군수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고흥과 해남, 여수에 핵발전소 10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계획돼 있다"며 "이것은 기초지자체장 혼자만의 입장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흥과 해남에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또 다른 발전소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빚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서남해안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오염, 중금속 오염 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미 인근 바다를 공유하는 신안군, 진도군이 나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전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력발전의 신규 건설을 포기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도 폐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고흥·해남군수는 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전남도도 화력발전소 추진 중단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한 건설사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7조원을 들여 4000MW급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2020년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 중국의 다국적 전력회사인 MPC도 최근 해남군 화원면 해안일대 250만㎡ 부지에 7조 6000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5000MW의 전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뜻을 군에 밝혔다.

anna@



## 광주환경연 "어등산 골프장 先개장 안된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 설 골프장 시설 공사가 완료되며 '선(先)개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어등산 관광단지 골프장 '선(先)개장' 문제를 두고 광주시가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1 보도<4월 23일>와 관련, "광주시는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환경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쥬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완공된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골프장 우선 개장을 언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추진된 어등산 테마파크 사업은 광주시가 환경단체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2005년) 당시에 무리한 개발계획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추진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등산 테마파크 사업은 광주시가 분명하게 책임지고, 최초 기본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시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등산 테마파크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kimho@

### 영광 핵발전소 앞 28일 '핵없는세상' 선언대회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영광핵발전소 앞에서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선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출범선언, '영광원전 시민안전점검단 구성촉구'서한 전달, 탈핵퍼포먼스 날려버려!(연날리기), 탈핵 자전거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광주전남행동은 선언대회 이후, 시민들과 함께 생활 주변 방사능 측정, 핵바로 알기 강좌, 영광원전 출력증강 철회,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저지 등의 지역활동과 고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철회 및 폐

쇄, 신규핵발전소 부지 해지, 폐연료봉 재처리 저지 등 전국적 탈핵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 공동행동 등 광주전남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전남지역 탈핵연대로 향후 전북과 제주를 포함해 호남권 탈핵연대로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ancut@

## 광주·전남환경聯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결정 환영"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해남군의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반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해남군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유치 동의안을 부결한 해남군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군의회의 이번 결정은 석탄화력이 야기하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석탄화력이 야기하는 각종 환경생태계 파괴를 사전에 막아내자는 적극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 "석탄발전사업자의 '주민보상' '지역발전' '세수확장' 등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생명과 평화' '환경과 생태계 보전'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송고한 결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는 지난해 말부터 오늘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해 온 해남 회원면민들과 대다수 해남군민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남에서와 같이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은 설 곳이 없으며,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위한 광주전남시도민의 의지가 확고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 및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고향, 여수 등지의 석탄화력발전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이날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그린 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 부결했다.

동의안은 의원들의 합의 속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전체 의원 11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무효 3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해남군이 회원면에 추진하며 지역내 뿐만 아니라 인접한 목포와 진도·신안지역 주민들과 6개월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던 화력발전소 유치는 사실상 무산됐다.

/ 구용희 기자 persevere9@newsis.com

**환경단체, 광주 수돗물 오염사고 진상규명 촉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 수돗물 오염 사고와 관련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용연정수장에서 응집제가 평소보다 10배 넘게 과다 투입됐으나 문제의 수돗물이 가정예까지 보급되도록 광주시가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수돗물 관리와 사고 대처 시스템에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제 수돗물이 광주천으로 유입돼 천여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이 수돗물이 인체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문제가 있는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보낸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고와 대처는 그동안 광주시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해 큰 불신을 남겼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서 현장 근로자의 실수로 약품 드레인 밸브가 오작동되면서 응집제가 평소보다 10배 정도량 과다 투입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오염된 물이 광주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 광주CBS 이승훈 기자

## 영광원전 방사능 사고뎀 55만명 사망 451조 피해

- 사고 피해 시뮬레이션영향구역 최대 197km
- 서울·경기도까지 피해

영광 원자력발전소(이하 영광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년)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년)과 같은 재앙이 발행할 경우, 사망자는 최대 55만명, 피해액은 45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승준 관서학원대 부교수의 원전 사고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영광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생할 경우, 집단 피폭이 최대 74만명, 급성 사망이 5784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8708명, 유전 장애가 6563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광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 규모의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단 피폭이 최대 1249만6000여명에 이르고 급성 사망이 1만2228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55만692명, 유전 장애가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피해도 천문학적 규모로 예상됐다. 영광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4조6000억원에서 최소 17조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규모의 재앙이 발행했을 경우, 최대 450조 9000억원에서 최소 209조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광원전 사고의 최대 영향 구역은 197km대까지 이르렀으며 방사성 물질은 서울과 경기도까지 덮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급성사망자 최대 4만8000명, 암사망 8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사망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으나 30km이내 지역의 피난 기간이 2~15일 걸린다고 가정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은 한 명도 피폭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의 실험에서는 원전 사고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환경연합 "광주시 중장기적 탄소감축 계획 마련해야"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의 미래는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면 지속불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5일 세계환경의날 40주년을 맞아 광주시에 '2030탄소중립도시 광주만들기'를 4일 제안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책제안서를 통해 "광주시와 국내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난 20년 동안 도시 확장과 인구증가 등 도시화와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편리와 이기에 바탕을 둔 도로, 상하수도, 도시하천, 각종 건축물 등 도시 인프라가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적인 구조를 일상화시켰다"며 "'지속가능한 도시'는 단지 슬로건에 그쳤고 도시의 환경생태계는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포괄적으로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해 왔고 한 때는 태양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태양의 도시'를 설정한 적이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환경도시, 태양의 도시, 기후보호도시, 저탄소 도시 등은 구호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내놓을만한 성과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체적으로 광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라 말할 수 없다" 며 "향후 최소한 20년, 2030년을 내다보며 도시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 환경연합운동이 제안한 '2030 탄소중립도시 광주'의 구체적 정책으로 '광주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제도와 정책개혁이 있어야 하며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에너지효율성 향상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중립형의 건축물, 녹색교통체계 확립, 물 절약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확립, 탄소의 흡수원 도시녹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교육, 시민참여 국내외 도시와의 연대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년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권 보장'을 합의했던 40년 전 스톡홀름선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합의했던 20년 전 리우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리우+20'으로 각별하다" 며 "'리우+20'을 계기로 광주가 저탄소 미래 '탄소중립도시'로의 새로운 전환을 추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hancut@

시민단체 "광주폴리 시민대토론회 개최하라"제안



지난달 26일 열린 광주환경련과 지역문화교류재단의

'광주 폴리 이대로 좋은가' 시민포럼 □ News1 김태성 기자  
민포럼'에서 광주 폴리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평가와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5일 공개 제안서를 시에 발송했다.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과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임낙평)은 광주 폴리에 대해 '시민토론회' 개최를 광주시에 제안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 26일 열린 광주시 폴리 사업의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시

단체는 제안서에는 "폴리 사업은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향하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스타마케팅만을 강조해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1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차 사업을 강행하면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총평했다.

광주 폴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시민과 소통 없는 행정의 일방통행식사업 ▲광주 정체성·역사성·장소성의 조응 및 조화의 부재 ▲스타마케팅에 의존한 행정의 편익주의적 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조화의 필요성 ▲사업 주체와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행정력의 낭비를 지적하였다.

두 단체는 광주시에 ▲현재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2차 사업 일정의 잠정 보류 ▲각 계 전문가, 행정, 시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광주 폴리 사업 평가단 구성 ▲평가단의 전문적인 평가와 이를 기초로 시민여론조사 실시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통한 2차 폴리 사업 추진 여부 최종 결정을 제안했다.

/ hancut@



## 전남 '석탄화력발전소' 무더기 건립, 생태계 오염·파괴 우려

전남 5개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재벌 특혜 논란이 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전력거래소가 석탄화력 건설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MPC(전남 해남 4000MW), 포스코건설(전남 고흥 4000MW), 애즈워드트러스터(전남 고흥 2000MW), 한양(전남 여수 1000MW), GS에너지(전남 여수 2000MW) 등 5개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이는 강원 7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이처럼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마다 몰리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전력예비율 저하, 총 전력 수요의 59%인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석탄화력발전소 입지가 어민의 생계터전인 어장과 갯벌, 자치단체가 막대한 투자를 한 유명관광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우주기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천혜의 자연경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충남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82%)을 차지하는 지역은 인구 60만의 대도시인 천안시나 25만의 아산시가 아니라 인구 10만 내외의 보령, 당진, 태안 등 석탄화력이 입지한 지역이다.

충남에서 산업단지의 면적이 제일 넓은 당진시(36%)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개의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철강업체가 아니라 당진화력발전소로 알려졌다.

당진화력이 입주한 석문면은 당진시 12개 읍면 중 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의 89.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오염물질 종합세트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현 정부는 주민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역 곳곳에 건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2개 업체가 반영된 후 이번 6차 계획에서 재벌대기업의 석탄화력 진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공공재인 전기를 사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된 석탄화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감내하겠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설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끼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 아시아뉴스통신=이재호 기자





### 영광원전 6호기 또 고장, 지역민 불안.불신 가중

영광핵발전소 6호기가 또 다시 멈춰서며 영광원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57분 영광원전 6호기가 핵반응로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MG-Set)의 전원상실로 제어봉이 낙하해 핵반응로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의 누출 등의 추가 사고나 피해는 없었으나, 영광원전 6호기의 안전성에 또다시 의문이 일고 있다.

영광 6호기는 2008년 12월 6일 ‘제어봉 위치편차 오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제어봉 계통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6호기에서 지난 4월 30일 ‘핵연료의 결함’으로 인한 핵반응로 냉각재 방사능준위가 상승하는 사고와 열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인 ‘열전달 완충관’은 수년째 파손된 채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때문이기도 하다.

영광원전 6호기는 지난 2002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총 9차례의 사고나 고장이 있었다.

특히 영광원전이 ‘부적합 자재의 발생률’ 가장 많은 287건이 발생 등 영광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추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는 핵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봉계통의 전원상실로 인한 사고임으로 더더욱 철저한 원인규명과 추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철저한 원인의 조사와 분석과 안전성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영광원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점검단’의 구성과 공개점검, 블랙아웃 운운,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론조장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제어봉은 핵반응로에서 핵연료의 반응도를 조절해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핵발전의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비 중 하나이다.

/ 아시아뉴스통신=이재호 기자

**광주천에서 비엔날레 시민참여 사진작품전 열린다.**

‘물길, 도시를 깨우다’ 주제로 8월 31일부터 공모작품 100여점 전시

광주시가 2012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물길, 도시를 깨우다' 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천변 전시대에서 올해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 사진작품 공모전에 참여한 50여 작가,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한국현대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하고 광주비엔날레가 후원해 온 '나도 작가다, 「마실」 참여 프로그램' 의 하나로 광주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선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 광주천이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시민의 사랑을 받는 친수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2012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간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 조대현기자

## 광주환경연 "해남군의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재심의 부결 환영"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해남군의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재심의 청원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 해남의 미래를 바라며 석탄화력발전의 저지를 희망하는 해남군민의 민의를 반영한 현명하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해남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추진할 근거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환경연 "해남군의회와 해남군은 8개월여 찬반갈등과 혼란의 회오리에 빠져 있는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환경 파괴, 공동체 파괴, 자립적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대형발전사업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민을 믿고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를 믿는 지역발전과 개발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발 더 나가 수십년간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대형발전사업에 의한 혼란과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대형발전사업 영구포기 선언'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 또한 요구된다"며 "해남의 현명한 선택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고흥과 여수에도 영향을 줘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를 믿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화원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건'에 대해 반대 6명, 찬성 5명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5월 7일에도 해남군수가 제출한 유치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being@

### 비어 있는 옥상 활용 '생생텃밭' 개장

【광주=뉴스is】 구용희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전 10시30분 '생생텃밭' 1호 개장행사를 광주 북구 한사랑실버타운에서 갖는다고 5일 밝혔다.

개장식에서는 약 150㎡로 조성된 '생생텃밭' 1호 현판식과 함께 김장 채소인 배추 모종 등을 함께 심을 예정이다.

'생생텃밭'은 비어있는 옥상을 활용,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도시민의 건강도 살리고 냉방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 살리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주환경연합이 조성한 '생생텃밭' 1호는 노인 요양공간의 특성을 살려 휠체어 이용자와 허리를 굽히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배려해 서서 농작업을 할수 있는 등 힐링텃밭의 개념으로 조성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국장은 "옥상은 미래를 바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텃밭을 활용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등 새로운 생산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시의회 18일 기후포럼 개최

(광주=뉴스1) 김호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태양도시 광주, 부활을 꿈꾼다'를 주제로 기후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시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2004년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가 다시 한번 관련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상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운영위원과 차인수 동신대 수소에너지학과 교수는 각각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 사례와 태양도시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한 발표를 진행한다.

하태선 광주시 전략산업과장, 김보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이홍주 전남대 바이오에너지공학과 교수 등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 kimho@

**환경단체 "한전KPS, 나주호 연수원 설립계획 백지화하라"**

(광주=뉴스1) 위안나 기자= (사)시민생활환경회의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은 12일 "한전KPS는 나주호 인근 연수원 설립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전KPS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시 나주호 인근에 '한전KPS연수원' 건립을 추진중"이라며 "연수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두 차례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반려됐는데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전문가들은 연수원이 나주호 인근에 들어설 경우 비점오염원의 증가로 나주호 수질오염 가중, 법정보호종 서식지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많은 주민들도 나주호 인근 삼림욕장을 이용하고 있어 연수원보다는 생태관련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연수원 부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이 대부분인 보전관리 지역"이라며 "한전KPS가 이를 무시하고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한전사옥 혁신도시 이전을 빌미로 환경파괴 여론을 묵살하는 대형 공기업의 횡포이자 자사 이기주의"고 비판했다.

단체는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명분을 앞세워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들러리서서는 안된다"며 "연수원이 다른 적정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 anna@

### 4대강사업으로 하수관거 유실의혹

- 환경단체 "준설 때문에 역행 침식" ... 광주시 "태풍 피해"

광주광역시와 환경단체가 영산강 상류를 가로지르는 '하수관거' 파손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태풍 피해'라고 주장한 반면,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 당시 진행됐던



영산강 준설로 역행침식이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확인결과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연결하는 덕흥대교 바로 밑 덕흥보와 함께 있는 하수관거가 지난 2일 균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94년 완공된 이 하수관거는 가로 2.5m 세로 1.3m 크기며, 영산강 상류를 가로지르고 있다.

<광주광역시 덕흥보와 함께 있는 하수관거가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국진 기자>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균열된 적이 없던 하수관거가 지난 2일 태풍 불라벤 이후 균열됐고 13일 제16호 태풍 산바 때문에 70m 가량 유실됐다. 이로 인해 하수가 영산강으로 흘러들었다.

광주시는 하수관거 보강 등 응급 복구를 시도했으나 불어난 물 때문에 정상 복구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순남 광주시 하수계획담당은 "오수가 영산강으로 얼마나 흘러들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태풍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역행 침식이 일어난 게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영산강 준설 때문에 역행 침식이 일어나 덕흥보와 하수관거가 동시에 유실됐다는 얘기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국장은 "영산강 세굴과 재퇴적 현황을 시급히 파악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국진 기자 kjang@naeil.com

## 광주 5년내 3만가구에 태양에너지 공급 가능

- 시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 '태양도시 광주' 포럼
- 청사 등 1000여곳에 태양광 도입 8만kW 전력 생산



올 봄과 여름, 전국은 가뭄과 고온현상에 시달렸다. 지난달 말 불라벤과 덴빈, 그리고 최근 산바까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고온과 해일, 태풍 등의 이상기후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파괴력과 그로 인한 피해양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의회 주최로 18일 오후 광주시 의회 회의실에서 '태양도시 광주, 부활을 꿈꾼다'를 주제로 기후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광주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국제태양에너지학회를 개최와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솔라시티' (태양도시·Solar City)로의 변모를 꾀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태양 관련 산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의회 공동으로 태양도시 광주의 변모를 위한 기후포럼이 '태양도시 광주, 부활을 꿈꾼다'를 주제로 열렸다.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차인수 동신대 수소에너지학과 교수의 '태양도시 광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의 태양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8년 1113toe의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해 전국 7대 도시중 서울(2211), 대구(1351), 대전(1205)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양광의 경우 모두 6517MWh를 생산해 서울(4988), 대구(3756) 등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광주의 태양열 생산량은 1024toe로 줄었다.

최근 지자체마다 화석에너지 사용량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 위

중심의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국제태양에너지전환

광주시가 지난 199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사업, 설치의무화사업, 시범보급사업, 자율보급사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1차 보급 사업' 을 실시해왔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광주시가 연구·기업지원기관,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아시아 그린에너지 허브' 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구시의 솔라시티와 상생 및 경쟁 체제를 구축해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기업지원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사업, 2014년 세계수소 에너지대회 유치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계기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상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운영위원은 '도시에서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의 사례' 주제발표에서 광주는 전력생산과 자립도면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실질적인 주체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 중앙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 체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인식수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베를린 태양청사, 프라이부르크 기후행동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며, 해외에서는 지자체가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국내에선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5년 이내에 3만 가구에 태양에너지 공급하자=기후포럼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는 5년 내에 3만 가구, 장기적으로는 5만~10만 가구까지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청 청사를 비롯해 공공청사 지붕, 옥외 주차장, 학교 지붕 등 1000여곳의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도입하면 8만k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8만kW의 전력은 2만6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기업이나 민간이 소유한 대형 건축물이나 옥외 주차장 등 300여곳에 태양에너지를 도입하면 1만5000kW의 전력을 추가 생산해 5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기업과 지역경제계, 지역의 대학과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며 "광주시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태양에너지 도입에 따른 제도 와 정책, 그리고 기술적인 기반을 구축하면 된다" 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잇단 원전사고. 환경단체 '가동 중단 요구'

- 신고리 1호기-영광 5호기 같은날 가동 중단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 등 원전 2기가 같은 날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해당 원전 측은 이번 사고를 경미한 수준으로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잇단 원전사고에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1호기와 영광 5호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밝히기 전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신고리 1호기는 시험운전 시 8번의 고장 사고 중 2번, 영광 원전 5·6호기도 제어봉의 문제” 라고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어 “핵연료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제어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자연재해나 고장 등과 맞물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일 “오전 8시10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신고리 1호기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했다” 고 밝혔다. 원자로의 출력을 맡은 제어봉 제어계통의 문제로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이번 신고리 1호기 고장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도 신고리 1호기 고장으로 인한 발전 중단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의 점검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신고리 1호기 고장 후 재가동하는 데에만 2~3일 걸릴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예상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신고리 1호기 고장 사고에 대해서 “경미한 수준으로 방사능 누출 위험은 전혀 없는 0등급 단계의 상태” 라고 밝혔다.

또, 영광 원자력본부는 지난 2일 “오전 10시 45분 영광원전 5호기가 증기 발생기 저수위로 인해 발전을 정지했다” 고 밝혔다.

영광 5호기 고장도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고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 사고·고장 등급 기준에서 '0 등급'에 해당된다는 게 영광연전 측의 설명이다. '0 등급'은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손정호 기자 <온라인뉴스팀>

**환경단체 "광주시 특급호텔 추진 중단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광주시가 시청사 옆 옛 광주경찰청 부지에 특급호텔 건설에 나선 데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는 공공청사가 들어서야 할 업무지구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익사업을 이유로 쇼핑센터 등이 도입될 우려가 커 사적공간으로 이질감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특정사업 유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도시계획 변경은 타당한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특급호텔 건설로 교통문제를 유발하게 돼 최악의 도시계획 결정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교통 체계를 뒤흔드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과 의회의 동의를 포함한 변경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 호텔 유치 공모절차를 한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시청 옆 부지 1만 6천529㎡에 500실 이상 규모의 특1급 호텔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특1급 호텔 2곳(라마다, 홀리데이인 광주), 특2급 호텔 2곳(프라도, 신양파크), 1급 관광호텔 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호텔 추가 건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minu21@yna.co.kr

# 광주일보 2012년 10월 31일자

## ‘광주 도심속 생명의 물줄기’

- 광주환경연, 남광주지하철역서 내달 4일까지 사진전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달 4일까지 광주시 남광주지하철역에서 ‘광주 도심속 생명의 물줄기를 담다’ 를 주제로 사진 50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들은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이 지난 1년간 광주천 등 도심하천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틈틈이 기록한 사진들이며, 하천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특징이다.

모래톱은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 매달 정기적인 답사와 생태조사, 정화활동, 하천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모임이다. 주부, 교사, 화가,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활동 10년째를 맞고 있다.

사진전 기획을 맡은 박행림씨는 “전문사진작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하천을 애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기록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하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영광 원전 5, 6호기 위조 부품 · 잦은 고장...안전 불안 '중폭'



◆ 영광원전 5·6호기, 7천여개 부품 위조...가동 중단  
한국수력 원자력과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까지 10년 동안 영광5, 6호기 등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된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이 품질 인증서를 위조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위조 부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영  
광 5, 6호기의 가동을 5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까지 해외 품질 인증 기관의 품질 인증서를 위조해 납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인증서 위조는 모두 60건, 납품된 품목은 237개,  
7682개 제품으로 8억 2천만 원 규모이다. 이들 제품은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이다.

위조 부품이 사용된 원전은 영광 3, 4, 5, 6호기, 울진 3호기 등 5개 원전이다.

특히 이 중 영광 5, 6호기에 위조 부품의 98%가 사용됐다.

영광5, 6호기는 부품 교체가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 가동이 중지될 전망이다.

### ◆ 영광 5, 6호기 고장 잦아

영광원전 5, 6호기에 사용된 부품 7천여 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영광원전 5,  
6호기의 고장도 낮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영광원전 5호기는 지난 2002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무려 18차례나 고장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영광 원전 5호기는 지난 9월 2일 발전소 제어계통 통신카드 문제로 발전  
을 중단했다가 11일 만에 발전을 재개했지만 이들 만에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15일부터 변압기 내 가스 농도 이상으로 발전 출력을 80% 대까지  
낮추는 감발운행에 들어가 애초에는 10월 5일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이었다.

영광 5호기는 지난해 1월에는 정비를 마친 지 4일 만에 고장을 일으켰는데 당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모터 내에서 30cm 길이의 드라이버가 발견돼 허술한 안전 점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영광 5호기의 고장 건수는 20~30년이 넘는 울진 1호기 15건, 고리 1호기 13건, 영광 1호기 8건, 영광 2호기 8건 등 전국의 다른 원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영광 3호기 6건, 4호기 8건, 6호기 9건 등 다른 영광원전에 비해서도 많았고 가장 최근인 2002년 가동을 시작한 6호기의 9건보다도 많습니다.

영광 원전 6호기도 지난 7월 30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됐고 지난 4월 말에도 핵연료봉에 결함이 발생해 방사능 가스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2002년 말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9번째나 고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잇따른 영광원전 5,6호기의 고장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 ◆ 환경단체, 시민 안전 점검팀 구성해 원전 총체적 점검 요구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주한국 수력 원자력 측이 영광원전 5,6호기의 잦은 고장은 부품과 관련이 없다고 강변했으나 이번 위조 부품 사용 확인으로 고장 원인과 부품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수원이 그동안 원전 인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눈속임 한 셈이됐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 환경연은 "영광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안전 점검팀을 구성해 일상적으로 영광원전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수원은 부품비리를 방지하겠다며 반부패 협의회라는 유명무실한 관변단체를 만들어 여론 환기에만 열을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 환경연은 "원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원전이 영향을 미치는 반경 30km 이내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의회 등을 망라한 실질적 시민 안전 점검팀을 구성해 영광 원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총체적 점검 결과 영광원전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 드러나면 원전 폐쇄 등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마련해 후쿠시마 및 체르노빌 원전 대참사 같은 재앙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광주CBS 김형노 기자

**환경단체 "전남-제주 해저터널 공약 폐기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전남·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민주당이 발표한 전남-제주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해저터널 사업은 MB 4대강 사업'의 재판(再版)이자, 망국적 토건사업"이라며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 타당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공약으로 제시됐고 엄청난 홍역을 앓았다"며 "잘못된 공약으로 환경파괴의 불가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X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선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호남과 제주, 혹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과 하늘 교통이 불편이 없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minu21@yna.co.kr

**한국일보** / 2012년 11월 14일자

광주·전남 시민단체, 영광원전 국정조사 촉구

-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진보연대와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 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14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영광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영광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검증 부품에 대한 외부 제보가 있고도 자체조사를 빌미로 한 달여간 원전을 가동했고 지난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문제제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제어봉은 원전안전의 핵심인데 3호기 제어봉 관통관에 균열이 6곳이나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지난번 정비까지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위원회는 '2004년부터 균열 징후가 있었다'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영광원전 1~6호기 가동중지와 국제적 수준의 안전점검, 민간합동 조사단 구성, 전력부족 불안감 조장과 재가동 중용 중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해체, 의회·전문가·영광원전 반경 30km 내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직 구성 등을 요구했다.

/ 안경호기자 khan@hk.co.kr

환경단체 "광주 어린이집, 학교 방사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환경운동연합,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광주지역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103개소에 대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측정결과 최저 0.083 $\mu$ Sv(마이크로시버트)/h)에서 최고 0.173 $\mu$ Sv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평상시 국내 환경방사선량의 범위인 0.050~0.300 $\mu$ Sv에 해당한다.

단체는 "광주지역의 공간방사선량은 현재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며 "일부지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됐지만 측정 당시의 강우 및 풍향, 지형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영광원전의 위조부품 및 제어봉 관통관 균열사고 등 잦은 사고 및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영광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어린이집, 학교를 우선 진행한 것도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유아,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사는 민간에서 최초로 광주지역 전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측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환경단체는 생활주변 방사능 측정과 광주도심의 주요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 한 관계자는 "영광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생활주변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광주시도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주변 방사능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에에는 현재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감시망에 의해 지방측정소 1개소, 간이측정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정형으로 생활주변에 대한 측정은 이뤄지지 않고 공간 감마방사선량 감시만 하고 있다.

/ hancut@



“광주천 생태환경, 광주시민이 지켜야죠”

- ‘물환경대상’ 수상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회장



“광주천으로 크고 작은 동물들이 다시 모여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의 광주천지킴이 활동 소모임인 ‘모래톱’ 이 올해 SBS ‘물환경대상’ 시민실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03년 20명의 광주시민들이 모여 창립한 시민단체가 10년간 꾸준한 생태지킴이 활동을 펼친 끝에 수상의 영예까지 안은 것.

홍기혁(53·사진) 모래톱 회장은 “광주천의 맑은 물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며 “인간 중심의 하천을 생태계로 되돌려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돌보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공직에 근무하던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모래톱에 가입한 뒤 생태지킴이 역할을 자처하며 회장까지 맡았다. 모래톱 회원들은 지난 10년간 광주천의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천 홍보활동과 함께 구간·시기별로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활동을 빼놓지 않았다.

책자와 지도까지 만들며 학생들에게 하천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9년 수해를 입었을 당시 광주시에 수해복구 방향에 대한 정책까지 제안했다. 활동반경이 커지면서 회원은 44명까지 늘어났다.

홍 회장은 “광주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 전문가’ 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식물을 하나하나 파악해가면서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며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큰 활동중점으로 삼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한 때는 영산강 오염의 60%가 광주천이 주범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오염돼 있었지만 최근 주암댐에서 새로 물이 들어오는 등 광주천을 살리기 위한 활동 폭은 커지고 있다” 며 “지난해만 해도 동물 배설물이 하천에 흔하게 버려졌지만 꾸준한 계도활동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시민들도 보전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물환경대상 시상식은 다음달 7일 오후 6시10분 방송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저소득층에 쌀·연탄 전달

- 광주광역시 및 시민단체와 함께 25가구에 3000장



▲ 에관공 광주전남본부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이종배 본부장)는 밥상공동체 전주 연탄은행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일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연탄나누기는 에너지다이아트에 참여한 기업과 은행,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 활동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뜻 깊은 나눔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광주환경운동연합, 에코바이크 등 지역 시민단체회원들이 참여해 25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에관공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은 방문가구마다 쌀 10kg을 직접 전달하고, 전기 절약을 위한 생활 속 실천방법을 홍보하는 등 봉사활동을 적극 나섰다.

이종배 지역본부장은 “쌀과 연탄나누기 행사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채덕중 기자 yesman@e2news.com

**영광원전 사고다발 등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의 환경운동연합이 올 한해 지역 주요 환경 현안을 되짚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24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로는 ▲영광원전 잦은 사고와 '짜퉁 부품' 파문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유력 ▲고흥·해남·여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저지 ▲광주 수돗물 사고 ▲영산강 수질악화와 지하수위 상승 피해 확산 등이 꼽혔다.

▲지리산,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부결 ▲전남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광양 불산 제조공장 계획 백지화 ▲여수 국가 산단 업체 특정수질 유해물질 무단배출 ▲기름과 태풍 등 기후재난 피해 심화도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사회적 문제와도 연계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4대 강 사업으로 영산강의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지하수위 상승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논란은 지난해 원자력 발전소 논란에 이어 갈등과 혼란을 낳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 전 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광주환경공해연구회”는 89년 3월 17일 이 땅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또한 92년 2월 29일 “광주환경공해연구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마감하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였다.

‘93년 4월 29일 그 동안 환경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건설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전국조직 창립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제3기의 민간환경운동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2000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명칭 변경)”을 창립하였다.

##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FEM GwangJu”라 한다.

제 2조(목적)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 2.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 3.환경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 4.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 5.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지원·지지
- 6.국내외 환경관련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 7.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 5조(자격)

1.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격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조(의무)

1.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7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 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본 연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제 8조(상벌)

1.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장 총 회

제 9조(회의)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 10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 11조(성원)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13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관 제정 및 개정
- 2.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3.공동의장 및 감사 선출
- 4.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 5.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6.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 제 4장 조 직

제 14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① 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 ② 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조(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공동의장, 환경교육원장, 부설 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과 상임의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 18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

제 19조(후원회)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조(환경상담실) 환경문제와 공해피해를 상담하고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환경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1조(자료정보실) 환경관련 자료의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 자료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환경교육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조(특별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 1.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2.지역조직 및 회원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사무처)

1. 본 연합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 5장 재정

제 28조(재정) 본 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정위원회의 사업수익금,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0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31조(정치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 ◆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개정) 정관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3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준칙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

.....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36-2 (북동신협 3층)

T. 062) 514-2470 F. 062) 525-4294